

# 한반도 통일비전과 국제협력

제1회의 **한반도 통일비전과 국제협력**

한반도 통일비전과 국제협력

이홍구(전 국무총리)

제1회의 토론

제2회의 **통일대비 무엇을 할 것인가: 통일연구원의 역할과 발전방향**

통일과제의 성격 변화와 통일연구원의 새 역할

이상우(전 국방선진화추진위원장)

제2회의 토론

# 한반도 통일비전과 국제협력

## 한반도 통일비전과 국제협력

인 쇄 2011년 07월

발 행 2011년 07월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통일연구원장

편 집 인 기획조정실

등 록 제2-2361호 (97.4.23)

주 소 (142-728)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1307(수유동)

전 화 (대표) 900-4300 (직통) 901-2521 (팩시밀리) 901-2541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기획디자인 (주)에원기획 (T. 02-745-8090)

인 쇄 처 (주)에원기획

ISBN 978-89-8479-602-7 93340

가 격 4,000원

© 통일연구원, 2011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정부간행물판매센터: ·매장: 734-6818 ·사무실: 394-0337

- 본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 프로그램

13:30 ~ 13:50 등 록

13:50 ~ 14:10 개회식

개회사 서재진 통일연구원장

축사 현인택 통일부 장관

김세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격려사 박진 국회의원

제 1 회의 **한반도 통일비전과 국제협력**

사회: 김진현 전 과학기술처 장관

14:10 ~ 15:40 기조발표 한반도 통일비전과 국제협력

이홍구 전 국무총리

토론 Kathleen Stephens 주한 미국대사

Muto Masatoshi 주한 일본대사

Konstantin V. Vnukov 주한 러시아대사

15:40 ~ 16:00 휴식

제 2회의 통일대비 무엇을 할 것인가: 통일연구원의 역할과 발전방향

사회: 김학준 동아일보 고문

16:10 ~ 18:30 **기조발표** 통일과제의 성격 변화와  
통일연구원의 새 역할  
이상우 전 국방선진화추진위원장

**토 론** 박석환 외교통상부 제1차관  
엄종식 통일부 차관  
강호인 기획재정부 차관보  
문창극 중앙일보 대기자  
김창기 월간조선 사장  
길정우 전 중앙데일리 발행인  
허문영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폐 회 사** 서재진 통일연구원장

18:30 ~ 20:30 **통일연구원 개원기념행사**

**만찬환영사** 정옥임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

**만찬축사** 김영우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의원

# 개회사

안녕하십니까? 통일연구원 원장 서재진입니다. 통일연구원 개원 20주년 기념 학술회의에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기조발표를 맡아주신 이홍구 국무총리님께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총리님께서는 독일통일 당시 통일부 장관에 재임하시면서 남북통일을 준비하기 위하여 우리 통일연구원을 설립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셨습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님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김세원 이사장님께서 귀한 시간을 내셔서 축하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연구원에 대한 조언과 도움을 주시고 계십니다.

통일은 남북대화뿐만 아니라 통일외교가 중요한 시대입니다. 국회의원 박진 의원님께서 통일연구원 행사에 기꺼이 참석하시어 격려사를 해 주시는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한 손님이신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대사님, 무토 마사토시 주한 일본대사님, 콘스탄틴 브누코프 주한 러시아 대사님, 귀한 시간을 내셔서 한반도 통일 비전과 국제협력에 대한 학술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첫 회의의 사회를 맡아주신 김진현 한국역사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남북분단역사를 하루 빨리 끝내고 역사박물관에 전시하고자하는 의미에서 오늘 특별히 회의의 사회자로 모셨습니다. 제2회의에 참석해 주신 인사 여러분께도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제2회의의 사회를 맡아 주신 김학준 전 동아일보 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조 발표를 맡아주신 이상우 전 국방선진화추진위원장님, 우리 연구원 초기부터 이사를 맡으시고, 현재는 연구원 고문으로서 연구원 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박석환 외교통상부 제1차관님, 엄종식 통일부 차관님, 강호인 기획재정부 차관보님 국사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문창극 중앙일보 대기자님, 김창기 월간조선 사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통일연구원의 OB 멤버들을 대표해서 참석해 주신 김정우 전 중앙데일리 발행인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국제학술회의는 통일연구원 개원 20주년이 되는 시점에서 아직 통일을 실현하지 못한 과거를 성찰해 보고 미래에 대한 새로운 결의, 그리고 새로운 통일의 비전을 토론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국내외적으로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해 가장 저명한 인사들이 참여한 회의인 만큼 오늘 통일의 비전과 국제협력, 통일대비의 방향에 대한 좋은 성과가 배출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4월 8일

통일연구원 원장 



# 축 사

통일연구원은 지난 20년간 통일부와 함께 남북관계의 높은 파도를 넘으면서 통일문제를 고민해 왔습니다. 서재진 원장님을 비롯한 통일연구원 모두에게 축하와 감사, 격려를 드립니다.

캐슬린 스티븐스, 무토 마사토시, 콘스탄틴 브누코프 대사님께 각별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주변국 대사님들을 한 자리에 모시고 한반도 통일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큰 의미를 지닌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조발표를 준비해 주신 존경하는 이흥구 전 국무총리님과 이상우 전 국방선진화추진위원장님, 김진현 전 장관님과 김학준 고문님을 비롯하여 학술회의를 함께해 주시는 패널 한분 한분께도 감사를 드리고 또 오를 같이 격려사와 축사를 해 주실 김세원 이사장님과 박진 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남과 북이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채택한 지 어언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는 이러한 탈냉전기에 대전환기 속에서도 남과 북이 가야할 나침반이었습니다. 비핵화도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한반도의 현실은 참으로 참담합니다. 북한은 20년 전 나침반이 가리키던 방향과는 정반대로 가게 되었습니다. 핵무기 개발에 매달리면서 경제를 최악의 상황으로 만들었고, 개혁개방을 거부하며 주민들을 가난과 궁핍으로 내 몰고 있습니다. 이제 현대 정치사에 유례없는 3대 세습을 추진하며 탈냉전 이후 또 한번의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또한 군사적 모험주의는 더욱 강화되고 있는데, 바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이 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은 막대한 인명을 손상시킨 두 차례 군사적 도발에 대해 한마디 사과도 없이 대화나 전쟁이나라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북한이 말하고 있는 대화의 모습입니다. 그 안에는 책임성과 진정성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핵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핵화에 관한 모든 약속의 반대방향으로만 갔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의 기본적 책임은 북한 당국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북한이 진정성과 책임성을 가진다면 대화의 문은 언제나 열려있습니다. 평화통일을 준비하는 우리로서는 북한의 현재 처한 실상을 그냥 내버려둘 수 없습니다. 북한 문제는 우리 스스로의 문제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2,400만 북한주민은 통일한반도의 구성원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최근 정부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중단됐던 북한의 취약계층에 대한 민간단체의 지원을 다시 허용했습니다. 앞으로도 영유아,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계속 될 것입니다. 남북관계가 본 궤도에 오르고 남과 북이 평화통일로 가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지금 북한이 가고 있는 폐쇄와 고립의 길은 한반도의 미래가 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남북한 주민의 행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북한은 이제 정치적 결단을 하여야 합니다. 나침반을 되돌려 세계사의 본류로 향해야 합니다. 평화통일을 향한 새로운 남북관계의 길로 나와야 합니다. 그 첫 걸음은 두 차례의 군사적 도발에 대한 책임 있는 대처일 것입니다.

그리고 비핵화, 개혁개방에 대한 과감한 결단입니다. 이를 회피한다는 것은 북한 스스로를 더욱 어렵게 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보다 더 그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보편적 가치에 바탕을 둔 질서 있고 평화적인, 단계 있는 통일 과정을 원합니다. 이것은 장기적 과정이 될 것이지만 우리에게 많은 준비를 요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

통일부가 국민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응답자의 70% 이상이 통일을 원한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80% 이상이 우리의 통일 준비가 미흡하다고 응답했습니다. 한반도 통일은 지역안보불안의 근본적 원인을 해소할 것입니다. 동북아의 경제적 협력 확대와 공동체로 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폭넓은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 통일에 대한 지지를 넓혀 나갈 것입니다. 미·일·중·러는 우리의 주변국이자 6자 회담의 당사국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4개국 대사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10년, 20년은 우리가 걸어온 20년의 세월을 거울삼아서 한반도 평화 통일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길에 통일연구원이 계속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해 주리라고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국제 학술회의가 우리의 의지를 다시 다지는 매우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통일연구원 개원 20주년을 축하하며 오늘 학술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기대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1년 4월 8일  
통일부 장관 현 인 택

# 축 사

개원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이 뜻 깊은 자리에 함께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현인택 장관, 박진 국회의원, 이흥구 전 총리, 김진현 전 장관에게 감사합니다. 한반도 통일과 가장 큰 관련을 갖는 주변 4개국 중 3개국 대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통일연구원 원장과 많은 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토론의 주제는 한반도 통일 비전과 국제협력입니다. 비슷한 주제에 관한 학술회의는 자주 개최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회의는 천안함 폭침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개최된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또 3개국 대사님이 동시에 토론의 기회를 갖는 것도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통일은 우리 모든 국민의 오래된 숙원이지만 결코 서두를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통일을 이룩하려고 조급하게 앞서 갈수록 통일은 더 느려지게 되는 역설에 빠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독일의 경험에서도 시사를 얻을 수 있듯이 인내 그리고 준비입니다. 통일이 예정에 따라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통일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은 꾸준히 계속 되어야합니다. 또 분단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준비와 협력이 통일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길이라는 점도 명심해야합니다. 한반도 통일은 노력만으로 안 되고 주변관계국들의 이해와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점은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안전의 정착은 모든 이해국들의 이익에 기여하며 분단비용을 최소화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견해와 대안이 제시되길 기대합니다. 통일연구원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국제

연구원 중에서 남북한 관계 및 통일을 연구하는 유일한 정책기관입니다. 정부에 대한 싱크탱크로서 20년간 크게 기여해 오고 있으며 정책제안을 통해서도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얼마 전에는 통일연구원이 매년

발행하고 있는 북한인권백서를 UN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로 사용하였습니다.

끝으로 이 학술회의에서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국들의 견해가 논의되고 국제협력을 위한 철저한 대안이 제시되기를 기대합니다. 또 이 모임이 최근 급변하는 국제정치의 질서 속에서 한반도의 중장기 정책을 준비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20주년을 축하하며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하신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2011년 4월 8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김 세 원

# 격려사

통일연구원은 북한과 남북통일을 연구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크게 발전하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오늘 세미나를 통해 통일연구원이 통일과제연구를 위한 획기적인 패러다임을 제시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사건을 겪으면서 남북관계는 냉랭한 경색관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책임있는 태도와 진정성이 없는 한 남북관계의 진전은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판단입니다. 기본적으로 한국 정부는 북한에 대해 대화의 문을 열어 놓고 있습니다. 군사회담이 개최된 데 이어서 백두산의 화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실무회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은 남북한 대화의 물꼬를 트는 것으로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북한 관계가 담보상태에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북한의 강경한 태도입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군사적인 경계를 풀지 않는 한 남북한 관계를 개선하는 데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최근에 자스민 혁명이라고 일컬어지는 아프리카와 중동의 민주화 혁명이 북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튀니지, 이집트, 리비아에서 보이는 민주화 혁명이 당장 북한에 가시적인 변화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북한이 국제사회 변화로부터 완전히 고립되어서 존속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도 이제 선군정치를 포기하고 선민정치로 가야합니다. 북한은 이제 고립과 폐쇄를 탈피하고 개혁개방으로 가야합니다.

우리는 북한이 아프리카와 중동의 민주화 혁명으로부터 올바른 교훈을 얻기를 바랍니다. 일인독재와 장기집권과 경제실패와 자유와 인권의 탄압이 가져오는 결과가 어떤 것인지 이번의 혁명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북한이 잘못된 교훈을 얻는다면, 그것은 더욱 큰 문제입니다.

즉 리비아처럼 핵을 포기하면 외부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교훈이 될 것입니다. 경제에 실패한 북한이 주민을 영원히 철저히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북한사회는 예기치 않은 사태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군사무력도발로 남한과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한,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안전은 없습니다. 또 평화통일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정부는 기본으로 돌아가 북한이 위험한 길로 가지 않고 동북아시아의 평화가 파괴되지 않도록 현실적인 대북정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북한 주민의 삶과 인권의 실질적 개선이 동반되지 않는 대북지원정책은 북한의 의미 있는 정책과 노선을 이끌어 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북한과의 교류와 협력은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북한주민의 삶의 개선에 변화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남북통일을 이뤄야하는 기본적인 이유는 북한 주민에게 자유와 인권을 가져다주려는 것입니다. 현재 국회에 북한인권법안이 아직도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대북민간단체에 지원을 확대, 북한인권재단,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립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북한의

인권침해사례 증거를 수집하는 시설이 설립될 것입니다. 또 정부가 북한의 인권 증진을 위한 활동을 촉진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가까스로 통과한 후 국회에서 계류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늦었지만 미국과 일본에 이어 세 번째로 북한 인권법을 제정한 나라가 되어야합니다. 북한인권의 개선을 위해서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미래의 남북통일을 차분하게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이제는 북한이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서 올바른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또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더욱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북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평화통일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국제협력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6자회담은 북한의 비핵화에 관한한 성과가 미미합니다만 장기적으로 볼 때 6자회담은 동북아의 다자 대화 협력의 틀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제협력을 통해 남북통일 촉진되고 남북통일을 통해서 국제협력이 증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학술회의는 시기적으로 적절하고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남북관계의 미래를 위한 청사진과 현실적 정책을 도출하는 좋은 토론되길 바랍니다. 통일연구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11년 4월 8일

국회의원 박진



# 목 차

개회사

축 사

격려사

## 제 1 회의 한반도 통일비전과 국제협력

한반도 통일비전과 국제협력 ..... 3  
이홍구 (전 국무총리)

제1회의 토론 ..... 11  
Kathleen Stephens (주한 미국대사)

Muto Masatoshi (주한 일본대사)

Konstantin V. Vnukov (주한 러시아대사)

## 제 2 회의 통일대비 무엇을 할 것인가: 통일연구원의 역할과 발전방향

통일과제의 성격 변화와 통일연구원의 새 역할 ..... 25

이상우 (전 국방선진화추진위원장)

제2회의 토론 ..... 33

박석환 (외교통상부 제1차관)

엄종식 (통일부 차관)

강호인 (기획재정부 차관보)

문창극 (중앙일보 대기자)

김창기 (월간조선 사장)

길정우 (전 중앙데일리 발행인)

허문영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최근 발간자료 안내 ..... 59



# 제1회의 한반도 통일비전과 국제협력

한반도 통일비전과 국제협력

이홍구 (전 국무총리)

제1회의 토론



# 한반도 통일비전과 국제협력

이홍구 (전 국무총리)



# 제1회의

## 한반도 통일비전과 국제협력

▶ 사회: 김진현 전 과학기술처 장관

첫 세션의 사회를 맡은 김진현입니다. 우선 통일연구원 발족 20년을 축하드립니다.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왜 국제 컨퍼런스의 첫 세션에 사회를 보게 되었는지 궁금했는데, 제가 한국역사박물관 건립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때문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현재 광화문에 세워지는 역사박물관을 비각까지 연결해서 앞으로 통일이 되면 통일기념관으로 발전을 시키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일연구원의 40주년에는 통일기념관에서 이런 회의를 하고 싶은 것으로 서재진 원장의 뜻을 이해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대한민국의 통일에 관한 주요 인사들께서 모였습니다. 우선 기초연설을 해 주실 이흥구 총리께서는 요약이 어려울 정도로 여러 직책을 갖고 계십니다. 정부에서는 총리이시고, 학계에서는 서울대의 인망 높은 교수이십니다. 또한 중앙일보의 칼럼니스트, 여러 NGO 및 NPO의 직책을 맡고 계십니다. 한국의 국가건설의 중심에서 계신 분입니다.

이흥구 총리님의 기초연설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 기조연설: 이홍구 전 국무총리

오늘 회의의 제목은 한반도 통일 비전과 국제협력입니다. 비전이란 눈앞에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멀리 있는 것을 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멀리 보고, 미래를 예측하고, 또 희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먼 미래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먼 과거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연속성 있는 비전을 갖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비전을 갖기 위해서는 역사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통일문제의 존재는 분단 때문입니다. 왜 분단이 한반도에서 일어났는지를 살펴볼 때, 1945년까지 계속된 제국주의의 특징을 다시 한번 상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제국주의 시대는 먼저 근대화된 유럽 국가들이 중심이 되어 여타 세계지역에 식민지를 만들고 그곳에서 부를 착취, 이용한 시대였습니다. 그 와중에 식민지 쟁탈전, 제국주의국가 간의 싸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19세기 말이었던 1854~1855년의 청일전쟁, 즉 중국과 일본 간의 전쟁도 그 한 예입니다. 1868년 명치유신으로 일본이 동양에서 제일 먼저 체제를 서구화하고 제국주의 싸움에 끼어들었습니다. 그 결과로 중국과의 전쟁이 있었고, 중국과의 전쟁이 끝난 10년 후에는 또 러시아와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후 제1차 세계대전이 있었고, 제2차 세계대전에서는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과 러시아, 중국이 일본에 대항에서 싸웠습니다. 이러한 주변 나라들의 역사는 우리의 분단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분단의 배경이 강대국 간의 싸움에 있고,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데도 강대국과의 관계가 결코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1945년에 해방은 되었지만 38선을 두고 분단된 채 해방하였습니다. 이러한 분단은 한국의 문제뿐만 아니라 유럽의 문제도 됩니다. 알타회담의 경우처럼 강대국 간의 비밀리의 흥정으로 당사국이 영향을 받고, 어느 지역, 국가의 운명이 결정되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1945년 분단 이후, 제국주의

시대를 지나 미국과 소련이 주도하는 이데올로기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한반도는 미국과 소련의 이데올로기 대립이 제일 첨예한 지역이 되었습니다. 38선을 놓고 이데올로기의 대결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역사의 흐름을 얘기하는 것은 역사에 큰 고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1987년 민주화 첫 발걸음을 내딛었고, 같은 해 12월에는 국민들이 쟁취한 직선제 대통령선거가 있었습니다. 1988년에는 서울 올림픽이 있었고, 이것은 기적적인 일이었습니다. 서울 올림픽의 주제가 있던 '손에 손잡고'가 보여주듯이 냉전과 대결을 넘어서서 세계를 무대로 갈등을 해결하자는 것이 1988년의 분위기였습니다. 1988년에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새로운 통일방안으로 발표된 이래, 이는 냉전시대의 북침통일론을 넘어서서 오늘날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1988년의 통일방안의 큰 특징은 여소야대 속에서 4당 합의로 성립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시대는 숨 가빴습니다. 1990년에는 독일통일, 한국과 러시아 국교정상화가 있었습니다. 1991년에는 남북 기본합의서가 체결되어 남북이 모든 것을 상의해서하자는 생각이 생겨났고, 분단이후 처음으로 공동위원회가 많이 열렸습니다. 그 여세로 1991년에 비핵화공동선언이 발표되었고 한반도에서 핵무기의 생산과 배치를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 후 1992년에는 한중수교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한국과 북한이 UN에 동시 가입을 이루었는데, 이는 우리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두 개의 다른 체제가 한반도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잘 만들어 가자' 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1994년에는 김일성 주석과 김영삼 대통령의 정상회담합의가 이루어져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습니다만, 정상회담개최 3주 전에 김일성 주석이 갑자기 쓰러져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상당히 아쉬운 점은 남겨진 의제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엔의 동시가입은 있었으나 교차승인이 없었으며, 미국, 일본과 북한의 외교관계가 수립되지 않았고, 1953년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문제도 논의할 수 없었습니다.

앞을 내다보는 비전을 얘기하는 자리에서 지나간 이야기를 하는 의도는, 저는 지난 20년은 잃어버린 20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한반도도 세계사의 흐름에 맞추어서 앞으로 전진하겠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지난 20년은 공백, 후퇴의 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다시 본 궤도로 돌아갈 수 있을지 방법을 찾자는 것이 오늘 강조하고 싶은 주제입니다. 통일문제는 이미 분단 66년이 되니 다들 지치고 어떤 때는 짜증이 나서 이야기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숏컷(shortcut), 단숨에 문제를 해결할 지름길을 찾고자 하는 유혹이 심해지지만, 역사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역시 인내력을 가지고 모든 국민의 뜻과 지혜를 모아 한 발짝씩 앞으로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시점에서 가장 적절한 방법은 세계사의 주류에 돌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 과정에서 한반도의 분단, 그리고 분단 상황에서의 대결에 깊이 관여했던 주변 강국들의 역할이 중요한 것은 더 강조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에 관해 참석하신 세 대사님의 좋은 이야기가 있을 것입니다.

주변국이 한반도 문제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보다 성의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기를 희망합니다. 일본은 길게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웃나라로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미국은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동맹국이지만 세계전체의 리더십을 가지고 외교정책을 펴다보니 한반도나 아시아의 문제에 더 큰 중점을 두지 못하는 부분이 아쉽습니다. 아시아는 이제 예전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 지역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국가 상징인 독수리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이라는 독수리는 유럽(대서양)과 아시아(태평양)의 날개를 동시에 사용하지 않으면 더 이상 제대로 날기 어려운 시대가 왔으므로 아시아 민주화에 보다 주의를 집중시켜주시고, 그 초점이 한반도에 있다는 사실을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대국으로서 유럽 지역에 모든 생각이 집중되어 있었지

만, 이제는 아시아와의 특수한 관계를 생각해 주십시오.

그래서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에 대해서 헨리 키신저 박사가 이전에 한 얘기가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을 4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들 국가는 경제, 군사의 4대 강국입니다. 이 중에 세계 경제 1, 2, 3위가 다 있습니다. 미국, 일본, 중국이 그 1, 2, 3위 아닙니까? 또 하드 파워, 즉 군사력으로 하자면 세계 군사강국인 미국, 러시아, 중국이 여기 다 있습니다. 키신저 박사의 이야기는, 이 네 나라가 한반도 문제를 해결 못 한다면 앞으로 세계 여러 나라가 모여도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네 나라가 모여서 해결 못하면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열어서 뭐하냐는 것이 그 분의 얘기입니다. 저는 이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4대 강국이 한반도 문제에 적극적으로 보조를 맞춰주기를 기대합니다. 물론 그렇게 되도록 밀고 가는 것에는 우리가 풀어야 할 외교적 과제가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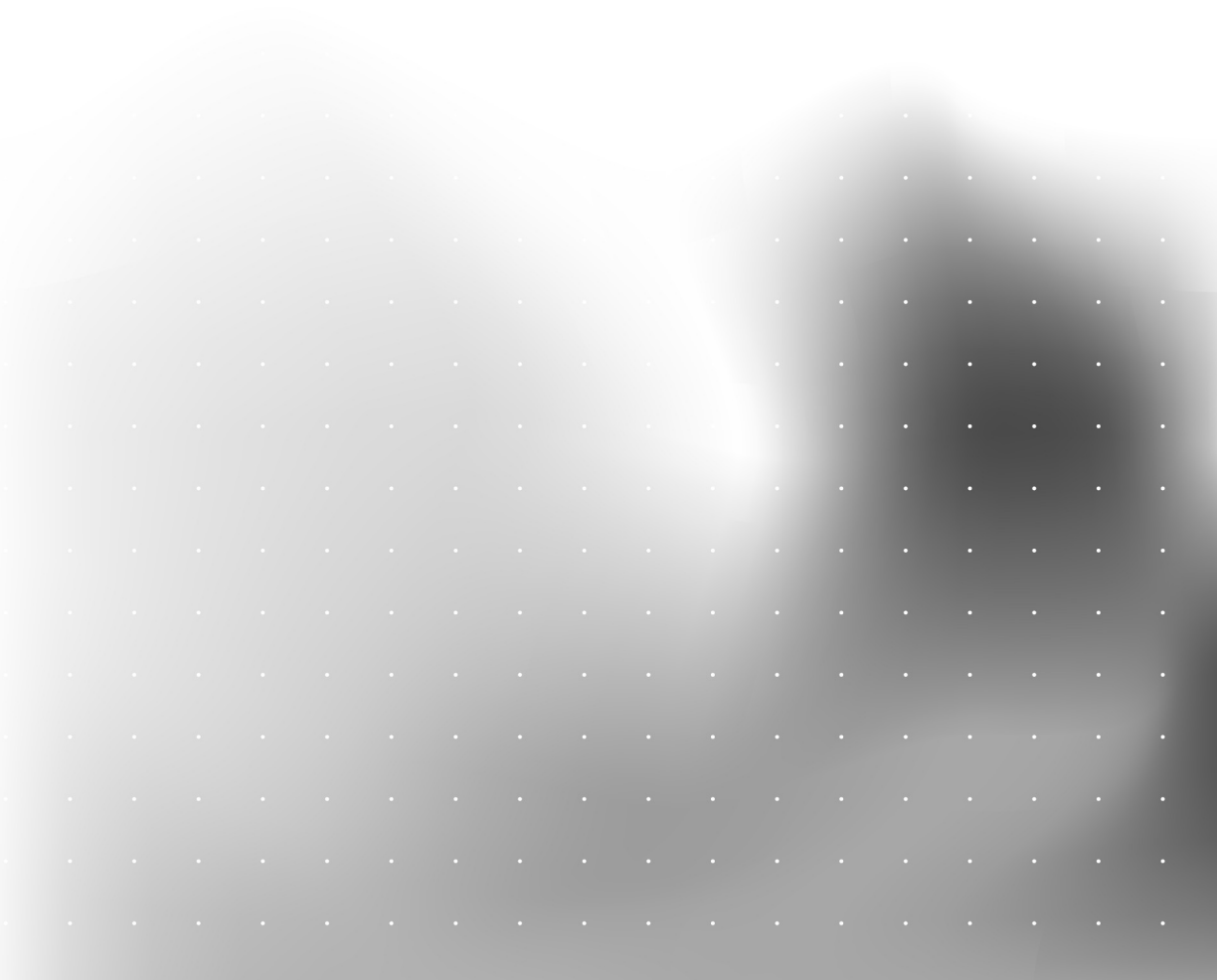
며칠 전에 『Public Diplomacy and Soft Power in East Asia』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성균관 대학의 이숙종 교수, 화란 국제관계연구소의 이안 델리슨이라는 두 분이 편집해서 낸 책입니다. 이 책에서는 역사의 고비를 넘어가고 있다는 것은 하드보다 소프트가 중요해 진다는 것이라고 말하며, 소프트 파워를 설명하고 이의 경제적 의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가 지금 커졌다는 것은 경제 규모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첫째로 1998년대에 아시아가 경험했던 IMF위기 때와는 달리, 아시아는 이번 세계금융위기를 지나면서 소프트 파워에 대한 자신감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둘째는 아시아가 하드 파워에 있어서는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하드 파워에서 모자라는 점을 소프트 파워로 보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바로 그런 자신감을 가지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소프트 파워가 중요한 시대가 왔다는 것은 다시 한번 국가의 정체성을 생각하는 기회가 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20년 공백을 넘어 다시 궤도를 찾을 수 있을까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다행히 2012년은 한반도에서 어려운 해로 이미 예고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내년을 '강성대국의 문을 여는 해'로 지정해 놓고 있고, 내년은 김일성 출생 10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큰 잔치를 벌일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우리와 주변 여러 나라들이 함께 북한에게 다시금 김일성 주석이 1990년을 넘는 고비에서 보여준 리더십으로 돌아가라고 강력히 권고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반도는 1990년, 1991년, 1992년에 모두 훌륭한 결정을 하였습니다. 비핵화 공동선언만 해도 그렇습니다.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 7천만 한민족의 안전을 확실히 담보하는 방법은 핵이 한반도에서 없어지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실제로 핵무기가 얼마나 가공할 만한가를 말로만이 아닌 실제로 경험한 것은 일본사람밖에 없습니다. 1945년 8월 히로시마 원자폭탄이 떨어졌을 때 25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25만 명 중에 10%가 한국사람이었습니다. 2만 5천 한국인이 죽은 것입니다. 징용, 노무자들이었던 많은 한국인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일본국민, 한국국민은 절대로 핵무기의 가공할만한 위력을 가볍게 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991년, 1992년에 김일성 주석이 비핵화 공동선언에 합의하고 이것을 북조선 최고인민회의가 합의한 것은 참으로 잘 된 결정이었습니다. 이것을 본 받아 김일성 때의 결정으로 돌아가라는 것이 우리의 희망이고 이것이 국제사회가 강력히 권고할 만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2년, 즉 내년을 남북 간 문제해결의 계기로 마련하기 위해 통일정책, 외교정책도 이 부분에 맞추어 전력투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에서는 내년 4월에 제 2차 핵안보정상회의(Nuclear Security Summit)가 열립니다. 57개국 정상, 유엔 대표들까지 모이는 바로 이 자리에서 한반도의 핵문제를 직·간접적으로 다루고, 남북 간에도 이에 관해 논의하는 계기로 삼아야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난 20년간의 우리의 성과를 되돌아보면서 내년을 남북관계를 풀어나가는 하나의 계기의 해로 삼을 것을 희망합니다.

## 제1회의 토론





## ▶ 사회: 김진현 전 과학기술처 장관

이제부터 대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대사님이 불참하시게 되시어, 세 분의 대사님들만 오시게 되었습니다. 이는 2011년 현재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협력의 한계가 아닌가 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먼저 앉으신 순서대로 주한 미국대사 캐슬린 스티븐스, 심은경 여사를 소개하겠습니다. 프레스콧 대학을 나오시고, 하버드에서 석사를 받으시고, 국무성과 백악관에서 유럽과 아시아 문제를 다루시다가 유럽에서는 포르투갈, 유고슬라비아에서 근무를 하시고, 아시아에서는 중국과 우리 한국에 근무하셨다가 이번에 한국으로서는 몇 가지 기록을 세우는 대사로 부임하셨습니다. 말할 것 없이 한국말을 하시는 대사고, 여성 대사이시고, 또 한국에서 경험이 있으시고, 역대 주한 미국대사들 중에 가장 많이 사랑받으시는 대사입니다.

그 다음은 무토 마사토시 일본대사이십니다. 요코하마 국립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하셨고, 외무성에 들어가셔서 동북아시아 과장, 하와이 호놀룰루 총영사, 주한일본 대사관에서 공사를 하시다가 쿠웨이트 대사로 가신 후, 다시 주한 일본 대사로 부임하셨습니다.

콘스탄틴 브누코프 주한 러시아 대사께서는 모스크바 국립국제관계대학원에서 역사학 박사를 받으셨습니다. 역사학 중에서도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에 대해서 논문을 쓰셔서, 아시아 전문가인 학자이시고 외교관이십니다. 중국에 오래 근무를 하셨고, 인도에 근무를 하셔서 거의 아시아의 최고의 정통이십니다. 우리나라에 오시기 전에 러시아의 제1국부국장도 하셨습니다.

이 세분은 모두 전문 외교관이십니다. 보통 외교관들이 토론을 하면 몸을 사리시고 토론의 활기가 부족한데, 세 분께서는 한국의 통일을 위해



아주 생기 있는 토론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 캐슬린 스티븐스 (Kathleen Stephens) 미국 대사

존경하는 이홍구 총리께서 건립한 훌륭한 통일연구원의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참석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 앞서 발표된 내용 안에 내가 말하고자했던 바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 짐을 좀 덜었다. 하지만 나는 미국을 대표하여 말할 의무가 있기에 미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입장을 말하고 싶다.

미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비전은 아시아 태평양 전체에 대한 비전이다. 우리는 공동의 번영과 평화, 진정한 안정을 바라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비극적으로 지연된 한반도의 통일이 평화적인 수단을 통해 한국 국민의 바람대로 이뤄지기를 지지하고 있다.

2009년 6월에 오바마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공동비전에 서명을 했다. 여기에서 한미공동비전문 의 한 줄을 소개하겠다. “한미 양국의 동맹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원칙하에 한반도에 평화적인 통일을 수립하여 한반도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더 나은 미래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수년간 가장 곤혹스러웠던 말 중의 하나가 미국이 한반도의 통일에 대한 비전을 미국의 권리로 생각하고 있으며, 이를 미국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려고 한다는 말이었다. 이것은 진실과는 정말 거리가 있는 말이다. 이홍구 총리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한반도의 분단은 20세기의 가장 큰 비극이었다. 하지만 지난 20년간의 모든 노력들은 헛되지 않았고, 아직은 21세기의 초반이라는 이른 시기이기에 더 서둘러 통일로 나아가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통일로 나아갈 수 있을까? 북한은 미국이나 한국의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역내의 모든 국가들의 인내력을 시험하는 도발을 해

오고 있다. 북한은 오늘날 가장 중요한 경제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 동북아지역에서 불안을 조성하고 있는 데다가, 핵무기 확산으로 미국의 기준뿐 아니라 국제적인 기준에서도 큰 위협을 가하고 있다.

우리는 앞으로도 북한에게 다른 길이 있음을 제시하여 줄 것이고, 북한이 현재와 같은 길을 계속하여 갈 때 어떠한 결과가 초래될 것인지를 함께 알려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과 일본 등의 동맹, 그리고 러시아, 중국, 그밖에 전 세계의 파트너들과 함께 한 목소리를 낼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이 앞으로 나아가는데 있어 중요한 요인은 무엇보다도 북한의 결정과 행동이다. 우리는 북한의 진정성을 보아야 한다. 즉 북한이 진정한 협상의 가능성을 받아들이고 건설적인 협상을 할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 이러한 협상의 목표는 북한이 2005년의 6자회담에서 결정된 원칙에 대한 공동성명을 수행하는 것이고, 미국정부는 이 공동성명에서의 원칙이 여전히 북한에 대한 가장 유의미한 비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 비전은 비핵화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고통 받아온 북한주민을 위한 새로운 미래를 가져다 줄 것이다. 우리는 북한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비핵화, 국제법 준용, 도발적 행동 자제 등을 통한 행동의 변화를 보여 줄 것을 기대한다.

올해 1월 19일에 후진타오 중국국가주석이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 후진타오 주석은 오바마 대통령과 함께 남북관계개선의 중요성과 남북 간의 건설적인 대화가 이를 위한 첫 걸음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양국가의 수반들은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에 대한 염려를 표하였으며, 2005년 6자회담에서 결정된 원칙에 대한 공동성명과 일관되지 않은 모든 행동들은 국제적인 의무에 반하는 것으로서 반대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였다. 나는 오늘 미국과 중국의 공동성명에 입각하여 말하고 있으며, 6자회담의 조기재개를 촉구함으로써 북한문제 해결에 대한 과정과 다른 적합한 문제들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하루 빨리 갖기를 원한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의 비전을 갖고 있고, 또한 공동의 계획이 있어 하나의 목소리를

낼 것이다.

그 외에 나는 다자적인 구도가 굉장히 중요함을 강조하고 싶다. 지난 몇 년간 미합중국의 오바마 정부는 태평양지역의 중요성을 이야기 하며, 지역의 발전과 발맞추기 위한 노력도 심화되어야 함을 강조해 왔다. 오바마 대통령은 올해 후반기에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될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참여할 것이며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욱 넓은 다자적인 참여를 통해 한 목소리를 낼 것이다. 6자회담은 비록 중단과 여러 어려움을 겪었지만, 2005년 6자회담에서 결정된 원칙에 대한 공동성명과 함께 역내의 안보협력의 중요한 메카니즘의 근간이고, 그 근간을 탄탄히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다.

긴 발표를 끝내면서 미국의 신학자 라인홀트 니부르(Reinhold Niebuhr)의 말을 인용하고 싶다. 이 인용문은 개인적으로 지난 20년간의 통일연구원의 노력, 북한의 기나긴 고통, 수십 년의 남북분단을 생각할 때 굉장히 적합하다고 생각이 된다. 앞으로의 역경과 어려움을 생각할 때 비관적 태도를 갖거나 좌절할 수도 있지만, 나는 우리가 함께한다는 사실에 큰 격려를 얻는다. 한반도 통일을 통해 탄생되는 새로운 가치들과 이익들이 한국과 역내 모든 나라들에 전해질 것이며, 국제협력의 필요성도 강조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인내하며, 굳건한 결의를 가질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협력해야한다.

라인홀트 니부어는 “우리의 일생동안 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일이란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희망으로 구원받아야 한다. 어떤 일이든, 그것이 아무리 미덕 있는 일이라도, 우리는 혼자서 해 낼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으로 구원받는다. 어떠한 미덕이 있는 일이라도 우리의 친구나 적의 관점에서는 우리의 관점에서만큼 미덕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의 최후의 형태로 구원받아야하는데, 그것은 용서이다.”

그다지 외교적인 말로는 들리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 인용구는 우리에게 화해와 통일을 민주적인 방법으로 하루라도 빨리 한반도에서 성취하려면

협력해야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것이 미국의 입장이며, 한국 국민의 입장이며, 우리 파트너들의 입장이다. 이것이 진정한 안정과 평화를 가져오는 오직 하나의 길임을 우리는 한 목소리로 외친다.

▶ 무토 마사토시 (Muto Masatoshi) 주한 일본대사

오늘 나는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일본의 입장에 대해 이야기를 할 것이다. 이홍구 총리는 “일본이 보다 적극적으로 한국을 도와주기를 바란다”고 이야기 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는 한반도 통일에 대한 나의 생각을 말하고 싶다. 또 우리는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해 굉장히 긍정적이며, 협력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하지만 일본이 가지고 있는 한반도 통일에 대한 생각을 살펴보기 전에 한국 국민이 일본의 한반도 통일관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먼저 살펴보고 싶다. 많은 한국 국민들이 일본인들은 한반도 통일을 지지하는 것에 거리낌을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한다. 그리고 일본은 바로 옆에 강력한 국가가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현실적이지 않을 뿐더러 한일 간의 관계를 봤을 때도 틀린 말이다. 한국의 통일은 우리에게 이익이 된다. 이에 관한 세 가지 이유를 들어 보겠다. 첫째, 한반도의 긴장완화는 동아시아의 안정과 평화에 기여한다. 둘째, 한반도 통일은 커다란 시장을 제공할 것이고 비즈니스상의 기회를 많이 발생시킬 것이다. 셋째, 통일 한국은 평화와 안정을 국제사회에서 도모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은 이미 국제관계상에서도 일본의 좋은 파트너이고, 더불어 통일한국은 일본과 유사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파트너가 될 것이기에 한반도 통일은 우리로서도 좋은 일이다.

이 세 가지 이유를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해 보겠다. 첫째, 동아시아의 지역안정과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동아시아의 불안정 요소는 북한으로,

북한은 대량살상무기, 핵무기, 핵실험, 미사일 실험을 진행해 오고 있다. 북한은 무력행사를 통해 체제를 유지하려고 한다. 그 실례가 연평도 포격, 천안함 도발과 같은 사건들이다. 뿐만 아니라 북한에서는 권력승계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김정은은 김정일이 갖고 있었던 당위성이나 경험 없이 북한의 미래는 지금보다 더 불안정해 질 수 있다. 나는 1970년대부터 한국의 상황을 주시해 왔다. 이흥구 총리께서는 지난 20년이 상실되었고 많은 기회들을 잃었다고 하셨지만, 나는 한국이 지난 50년 동안 이룩한 눈부신 경제적인 성장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한국은 이제 주요 산업국가 중 하나로, 경제 발전수준이 일본과 비슷하고 일부 면에서는 일본을 앞질러 나가고 있다.

1987년 이래 한국의 민주주의는 크게 성장했다. 나는 이러한 모든 발전이 한반도 통일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한국이 성숙한 민주주의에 기초한 통일을 추구하는 것은 동북아의 안정 도모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한반도가 통일되면, 일본과 미국의 안보비용도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을 비핵화하고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여 더 많은 인도적 지원이 이뤄지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 모든 일들이 한국과 같은 성숙된 민주주의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둘째, 통일로 인해 커다란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설명이다. 통일 후 한반도는 국토 면적 20만km<sup>2</sup>, 인구 7,500만의 국가가 될 것이다. 이 규모는 현재 일본 인구의 약 60%이고, 영국 인구와 동일한 수준이다. 여러분께서 얼마나 실감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사업가들에게 한일의 비즈니스는 이미 통합이 된 상태이다. 여기에서 일본의 시장, 한국과 북한의 시장이 다 통합되면 소비자 규모가 거의 2억 명에 달하는 시장이 형성된다. 더불어 러시아, 중국까지 연결 가능한 철도망을 구축하여 가스, 석유송유관이 한반도를 거쳐 가게 만들 수 있다. 그만큼 많은 물자, 돈, 사람의 교류가 한국을 거쳐 중국과 러시아로 흘러갈 것이다. 이는 동아시아의

경제에 큰 도움을 줄 것이고, 역내에 많은 사업 기회를 발생시킬 것이다.

셋째로 우리는 한국의 좋은 파트너가 되고 싶다. 내가 지난 8월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한국이 외교관계와 관련된 부분에서 얼마나 발전했는지 알 수 있었다. 많은 한국 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국제관계에 관여하고 있으며, 한국정부가 여러 가지 면에서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것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이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에게도 굉장히 긍정적인 일이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국과 일본은 비즈니스 면에서 통합되어 있으며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아주 적극적인 비즈니스 국가이다. 나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공동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이해관계도 비슷한 나라가 일본의 옆에 있어 좋다고 생각한다. 한일 양국 간에는 이미 많은 외교적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고, 한국이 더 큰 힘을 가진 나라가 된다면 협력의 수준이 더 높아질 것이며 함께 진행해 나갈 수 있는 일도 더 많아질 것이다. 그러므로 한반도의 통일은 우리에게 이득이다. 일본이 한반도의 통일에 대해 두려워 할 이유는 없다.

나는 일본이 최근의 지진과 쓰나미를 겪는 동안 한국 국민이 보여준 지지, 그리고 세계 각국의 지지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다. 한국 국민의 지지와 염려는 그들의 진심에서 비롯되었고, 일본의 비극을 자신들의 일인 것처럼 가슴 아파해 주었다. 일본도 가장 중요한 친구는 어려울 때 찾아주는 친구라는 말처럼 한반도의 통일의 문제를 우리 일이라고 생각한다. 한국 국민들이 우리를 도운 것처럼 우리도 최대한 안정적인 통일을 추진하려 한다. 그 과정의 어려움은 예측할 수 없지만 미국, 러시아, 중국과 함께 한반도 통일을 돕겠다. 다시 한번 한반도 통일이 일본에 도움이 된다는 나의 생각을 여러분께 전하고, 우리가 같이 협력하고 지원할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

▶ 콘스탄틴 브누코프 (Konstantin V. Vnukov) 러시아 대사

통일연구원의 개원 20주년 기념행사에 동료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음에 감사를 표하며, 한반도 통일과 국제 협력에 대해 몇 가지 이야기 하겠다. 20여 년 전에 베를린 장벽의 붕괴는 냉전의 끝을 알렸고, 이와 함께 두 강대국과 그 동맹국들의 갈등도 막을 내렸다. 그리고 이러한 냉전의 종결은 민주주의적 원칙에 기초한 국제기구들의 형성을 장려하였다. 하지만 한반도에서는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들이 일어나지 못했다. 상반되는 사회적, 정치적 체제의 두 한국이 38선을 사이에 69년간 두고 분단 상태를 이어오고 있다.

실제로 한반도는 군사적·정치적 긴장 속에서 균형을 잡고 있기에, 작은 불씨도 큰 전쟁으로 번질 수 있다. 작년에 있었던 비극적인 사건들이 한반도의 상황이 얼마나 불안정하고 긴장되어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때때로 러시아는 한반도정책에 대한 비판을 받기도 한다. 나의 한국 친구들도 러시아가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이것에 대한 대답으로 러시아는 실질적인 성격의 협력을 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싶다. 한반도는 러시아와 함께 극동지역의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시베리아에서 진행되고 있는 러시아의 대규모 계획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한반도의 통일은 러시아의 경제, 정치에 부합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실제적 상황에 대한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방안이 있을 것이라 확신하며, 6자회담이 결정을 내리는 데에 있어 최적의 메커니즘이라고 생각한다. 6자회담은 여러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좋은 메커니즘이지만 특히 핵문제 해결을 위해 최적이라고 생각한다. 한반도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남북대화의 재개와 6자회담의 재개를 위해 러시아의 이점인 남북한과의 좋은 관계, 미국, 일본, 중국과의 전략적 관계를 활용하고자 한다.

올해 초부터의 긴장완화에 있어, 러시아는 모든 당사자들과 협의를 진행해 왔다. 특히 우리 측의 6자회담 주협상자인 보르도프킴은 특별 방북 협의를 지난 2월, 3월에 진행하였다. 북한은 기존의 6자회담 조건이었던 UN안보리의 대북제재 해제와 1953년 휴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를 철회하였고, 우라늄농축프로그램을 6자회담 의제에 추가하였다. 또한 이에서 더 발전하여 핵 상황, 탄도미사일발사 일시중지, IAEA 전문가 사찰 허용 등을 받아들여 북한은 이제 6자회담의 참여 준비가 되어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변에서는 아직 준비가 충분치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해결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원칙으로 일관하고 있다.

북한과의 대화에서 우리는 남북한 대화 재개와 3자 경제협력, 즉 러시아, 한국, 북한 사이의 경제협력에 대한 지지도 함께 표명했다. 이 프로젝트는 3국간에 철도망을 연결하여 가스관을 설치, 통합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여 러시아의 극동지역에서부터 북한을 통과하여 한국에까지 이르는 망을 구성하는 것이다. 이것은 정치·경제적으로 매력적인 구상이며, 필수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러시아는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 큰 염려를 가지고 있다. 지난해 서해에서의 참사는 동북아시아의 평화 및 안보 메커니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다. 2년 동안 협상이 중단되었으나 러시아는 그런 와중에도 Guiding Principles라는 프로그램을 추진해 평화안보 메커니즘을 유지해 왔다. 이 원칙의 중심 개념은 북핵이 미국과 한국의 위협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주창해 온 북한을 포함한 역대 모든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다. 앞으로 이 메커니즘을 위한 다자간 문서를 체결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는 정치적, 국제법적으로 참가국의 의무까지 포함하는 문서가 될 것이다. 이러한 평화, 안보 메커니즘은 미래의 아태지역안보의 귀감이 될 것이다.





# 제2회의

## 통일대비 무엇을 할 것인가: 통일연구원의 역할과 발전방향

통일과제의 성격 변화와 통일연구원의 새 역할

이상우 (전 국방선진화추진위원장)

제2회의 토론



# 통일과제의 성격 변화와 통일연구원의 새 역할

이상우 (전 국방선진화추진위원장)



## 제2회의 통일과제의 성격 변화와 통일연구원의 새 역할

▶ 기조발표: 이상우 (전 국방선진화추진위원장)

분단 66년에 통일의 의미와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분단 이후에 태어난 사람이 한국 인구의 9할이 되어 분단 이전을 기억하는 사람이 모두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다 하루 아침에 인위적으로 헤어져 살게 된 분단 1세대가 겪었던 불편과 당혹감은 이제 더 이상 통일의 당위가 되지 않습니다. 통일은 이제 정감적 차원에서 가 아니라 이성적 판단으로 추구되어야 하는 국가적, 민족적 정책 과제가 되었습니다.

통일의 환경도 크게 바뀌었습니다. 분단 직후 남북한 모두가 조그마한 국가이던 때에는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통일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냉전의 와중에서 군사적 교두보라는 지정학적 관심의 대상으로만 머물러 있었던 한국이 북한 지역을 통합한다고 해도 국제정치에 큰 영향을 주리라고 주변국들이 생각하지 않았고 그래서 남북 통일문제는

‘민족내부문제’로 다루어졌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세계질서 관리국들이라 할 G20 국가의 하나인 대한민국이 북한을 통합한다는 것은 동북아 질서의 구조 변화를 가져오는 ‘국제문제’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 내부 문제로만 다루어서는 통일을 이루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통일은 통일을 추진할 주체인 한국 국민의 의식의 변화, 통일 대상인 북한 주민의 한국 국민을 보는 시각, 그리고 주변국의 관심 변화 등의 변화로 전혀 새로운 과제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통일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 통일정책은 통일을 주도할 국민의 의식 변화, 통일의 대상인 북반동포의 의식과 희망, 그리고 국제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여 우리가 바라는 ‘통일한국’의 상을 그려 놓고 이러한 통일에 이르기까지 펼쳐 나가야 할 범국가적 노력의 시간, 공간, 기관간 배분계획으로 짜나가야 합니다.

우선 정치 지도자들은 정당 강령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앞길을 보여주는 선명한 ‘통일비전’을 제시해주어야 합니다. 특히 ‘통일한국’의 모습에 대한 확실한 그림을 그려내야 합니다. 정치권에서 ‘통일비전’에 대한 합의도출에 실패한다면 한국 주도의 통일은 불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정부는 국민적 합의를 반영하는 통일한국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행동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 안보, 외교, 경제, 사회 모든 영역의 장기 정책과 통일을 연계하는 정책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국민들에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통일성취 후 남북한 체제를 하나로 만드는 구체적 계획도 미리 마련해야 합니다.

통일의 주체는 국민들입니다. 국민들의 단합된 통일의지가 형성되지 않으면 통일은 이룰 수 없습니다. 통일한국의 상을 정립하고 통일을 위하여 국민이 분담할 책임에 대하여 합의하도록 국민을 설득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과업은 시대정신을 앞장서서 다듬어 나가는 지식인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새 통일정책 패러다임 정립과 관련하여 통일연구원의 역할을 다시 한 번 강조해봅니다.

통일연구원은 20년 전 통일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체계적 연구를 하기 위하여 창설하였습니다. 북한의 현황 조사, 국민의 통일의식 변화, 국제환경, 북한의 통일정책 등의 분석, 그리고 우리 정부가 추구하여야 할 가장 바람직한 통일정책의 길 모색 등을 연구하는 국책연구소로 발족하였습니다.

통일연구원은 그 동안 우리 사회에서 북한 및 통일문제 연구의 중추적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통일여건 변화에 따라 새로운 통일정책 패러다임이 정립되게 되면 이에 맞추어 통일연구원의 활동 방향도 새롭게 짜야 합니다. 새로운 통일과제 연구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 연구 틀을 새로 다듬어야 합니다.

통일연구원은 앞으로 다음의 네 가지 영역의 연구에 연구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장기 비전 정립 지원 연구

통일은 이제 더 이상 ‘분단 이전 상태로의 회귀’가 아닙니다. 미래의 어떤 시점에서 우리가 ‘창출해내야 할 상태’입니다. 분단 이전 상태는 고정되어 있었지만 미래의 창조 대상인 상태로서의 통일이 되면 그 통일은 우리 국민의 소망을 반영하는 통일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평균적으로 한국 국민이 소망하는 미래한국의 모습은 더 잘 사는 한국, 더 성숙한 민주주의 정치가 펼쳐지는 한국, 더 강한 자주한국입니다. 국민 모두가 고르게 잘 사는 나라, 국민 모두가 ‘인권이 보장된 자유’를 누리는 나라,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존중받는 당당한 자주국가를 만들고자 하는 꿈을 우리 국민들은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 Global Korea 건설의 장기 비전에 통일을 맞추어야 합니다. 통일은 한편으로 이 장기 비전 실현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하고 또 한편으로는 북한 동포들도 우리와 함께 발전된 대한민국의 삶의 환경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추구해야 합니다.



분단 반세기가 되면서 남북한의 위상 차이는 분명해졌습니다. 폐쇄적 정제주의국가로 굳어진 북한은 가장 가난한 나라, 인권 불모지라는 실패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산업화,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가장 성공한 나라로 우뚝 섰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놓고 볼 때 통일은 대한민국 주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통일연구원은 한국 주도의 통일이라는 새로운 통일 비전을 세우는데 앞장서야 합니다. 그리고 Global Korea의 비전과 상응하는 자유민주통일을 이루는 정책을 개발해야 합니다.

### 통일에 이르는 과정 연구

분단 이후에 태어난 국민들은 ‘빠른통일’ 보다 ‘바른통일’을 원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의 틀을 깨는 통일은 바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통일을 위한다 하더라도 무력을 사용하는 전쟁을 통한 통일도 원하지 않습니다. 북한 주민을 설득하여 한국의 정치, 사회, 문화체제 내에 들어오도록 하는 점진적 통일을 바랍니다.

국민의 이러한 기대를 반영한다면 통일 과정은 현재의 2국2제(二國二制)에서 북한체제의 변화를 유도하여 2국1제(二國一制) 관계로 진전시켜 최종적으로 1국1제(一國一制)의 통일을 이루는 길밖에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노력과 북한 사회 내에서의 급격한 체제변혁으로 인해 각 단계별 전이가 빠르게 이루어질 수는 있을 것입니다.

통일연구원은 우리 정부,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펼쳐 나가야 할 통일 노력을 시차별로 연결하여 보여주는 ‘통일정책 전개 로드맵’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연구를 시작하여야 합니다. 특히 상이한 체제를 갖춘 2개의 주권국가가 병존하는 현재의 상태에서 북한의 체제개혁을 유도하여 ‘2개의 국가로 기능하나 같은 체제를 공유한 나라’로 관계가 발전된 2국1제로의 전이 과정을 잘 정리, 제시해야 합니다. 통일연구원은 국내외의 통일 관련 연구 기관이 담당해나갈 연구 업무에 지침을 줄 수 있는 국책연구원의 영도적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는 자긍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통일 노력의 추동력은 국민의 단합된 통일 열의에서 생겨납니다. 국민의 통일 열의는 국민의 통일문제 인식에서 비롯됩니다. 국민들이 통일의 목표, 북한의 현황, 그리고 통일과 우리가 추구하는 Global Korea의 장기 비전과의 관계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져야 국민들의 단합된 통일 추동력이 생겨납니다.

분단 직후에는 통일이란 '분단 이전 상태로의 회귀'라는 단순한 문제였으므로 통일의 당위에 대한 대국민 교육이 필요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통일은 온 국민이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할 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통일이어야 하는가는 '국민여론의 통합'이라는 인위적, 체계적 노력에 의하여야만 정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가적 차원의 통일교육 노력이 이제는 통일 노력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해나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국적인 교육체계를 구축하고 교육 요원을 훈련해야 하는 방대한 작업을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교육 내용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통일의 당위, 통일과정을 설득력 있게 해설하는 자료를 만들어 내는 일입니다.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일은 통일부 산하 통일교육원이 담당하고 있으나 통일교육 내용의 개발은 역시 통일연구원이 맡아서 수행해야 합니다.

## 제도, 의식의 통합 과제 연구

남북한간에 정치적 통합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통일이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을 다른 체제, 다른 문화 속에서 살아온 남북한 주민들이 하나의 민족공동체 성원으로 불편 없이 지내게 되기까지는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법제도의 통일, 경제체제의 단일화, 문화체제의 통합 등 하나로 다듬어 나가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동서독은 분단 45년 만에 통일을 이루었으나 동서독 주민간의 민족동질성 회복은 20년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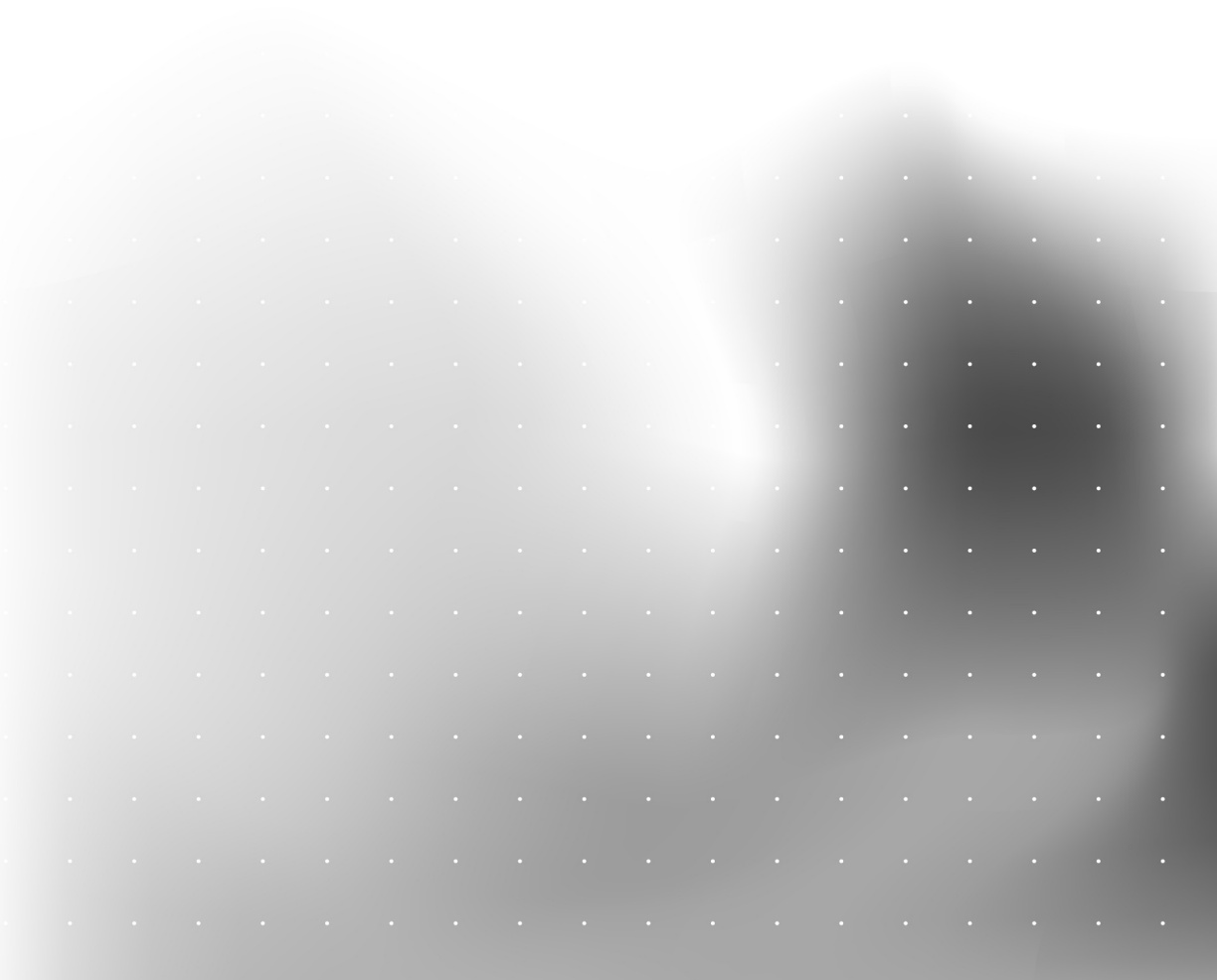
지난 지금까지도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한 독일학자는 재통합 과정은 분단기간 만큼 걸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계산대로라면 남북한 주민간의 의식 통일은 앞으로도 70년 이상 걸릴 것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통일연구원은 지금부터 남북한 사회의 체제통합을 위한 준비 연구를 시작해야 합니다. 법체제는 어떻게 통합해야 하며 각종 경제제도는 어떤 순서로 통합해야 할까, 그리고 교육제도와 교육내용은 어떻게 통일해나갈 것인가 등을 연구해 나가야 합니다. 반세기 이상 단절된 상태에서 각각 소속 공동체가 내세운 가치체제 속에서 살아온 남북한 주민들은 서로가 서로를 낯설어합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그들이 살아온 사회적 서식처 (social habitat)에 따라 결정된다는 지식사회학자들의 주장에 비추어 보면 평생을 전혀 다른 생활양식이 지배하는 사회 속에서 살면서 각각의 체제에 친숙해진 남북한 주민은 서로 동일 공동체 소속원이라는 일체감을 가지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됩니다. 체계적인 교육 등 인위적 노력이 있어야 남북한 주민간의 의식의 통일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 맺는말

지난 20년 동안 통일연구원은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 속에서 통일정책의 바른 길을 지키는 방향타의 과업을 훌륭히 해왔습니다. 이제 통일정책이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추어 재조정 되는데 따라 통일연구원은 새로운 과업을 시작한다는 각오로 통일연구의 영도적 기관으로 거듭나 주기를 당부합니다.

## 제2회의 토론





## ■ 박석환 (외교통상부 제1차관)

먼저 통일연구원 개원 20주년을 축하한다. 오늘 정부 및 사회 각 분야 저명 학자들, 그리고 통일에 관심이 있는 방청객 여러분과 함께 깊은 의미가 있는 이 자리에 참석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그리고 회의 준비를 위해 수고한 통일연구원에도 감사를 전한다. 작년 이명박 대통령께서 8.15경축사에서 3대 공동체 - 평화 공동체, 경제 공동체, 민족 공동체 - 통일구상을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사회 각계에서 통일 논의가 폭넓어 지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통일논의의 모멘텀이 올해 통일연구원 개원 20주년과 맞물려서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 오늘 토론을 통해 앞으로 더욱 활발한 활동을 하게 된 20세 성년을 맞이한 통일연구원을 중심으로 우리의 통일 논의가 더욱 정교화 하기를 기대한다. 방금 이상우 위원장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21세기의 통일은 당사자인 한국 국민과 북한 주민의 의식변화뿐만 아니라 주변국의 관심과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하는 것이 과제라는데 공감한다.

금번 학술회의의 대주제가 한반도 통일 비전과 국제협력이고, 오늘 제1회의에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대사들이 발표한 견해에서 보여 지듯이 한반도의 통일이란 현실적으로 남북의 노력 외에도 주변 국가들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 그리고 협력을 확보하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먼저 국제사회의 지지 확보를 위해 중요한 것은 한민족 공동의 이익을 충족하면서도 주변국의 지지 얻을 수 있는 통일한국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는 것이다. 우선 통일 한국은 비핵 평화국가로서 동북아 및 세계 안정과 번영에 적극 기여하게 될 것이다. 비핵화를 통해서 역내 안보 위협 요인을 제거하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토대로 세계평화,

개방, 그리고 정의 증진에 기여할 것이다. 둘째, 통일된 한반도는 동아시아의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교량으로서 동북아를 하나로 연결시킬 것이라는 점이다. 통일한국은 약 7,000만 인구의 중견국가로서 동북아 및 세계경제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할 것이며, 역내 국가들은 일종의 평화배당금을 향유하게 될 것이다. 셋째, 통일한국은 국제사회 발전에 적극 기여하게 될 것이다. 한국은 짧은 시기에 최빈국에서 신흥국으로, 권위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 국가로 변환하였다. 또한 G20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중견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다양한 범세계적 이슈 해결에 더욱더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통일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북한의 비핵화가 필요하다. 북한은 최근 전제조건 없는 6자회담 복귀가능성을 시사하면서도 핵 보유국임을 자처하면서 우리측 농축활동이 비핵활동이라고 주장하는 등 여전히 비핵화에 대한 근본적 입장변화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 북한 우리측 농축은 9.19공동성명 및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서, 안보리 차원의 조치를 포함한 국제 사회의 단합된 대응이 필요하며, 정부는 이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아울러 6자회담 등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한이 행동으로 비핵화의 의지를 보여주는 등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 있는 태도변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이와 함께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기 위한 외교적 노력과 동시에 국내적 역량의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먼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뿐만 아니라 EU와 UN 등 국제사회가 납득할 수 있을만한 설득논리를 더욱 세분화, 정교화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한반도는 지정학적 이유로 주변국들의 이해관계가 밀접히 연관되어 있으므로 여타 국가들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우리나라만의 입장에서 한반도 통일을 말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내적 여론 및 역량을 결집 시켜서 우리의 통일 의지를 대외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통일의 막대한 비용 부담, 그리고 남북 간 사회적·경제적 격차로

우리나라가 통일을 진정으로 원치 않는다는 국제사회의 시각이 일부 존재함을 염두에 두고 이러한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 여기에 대해 한국에 정착한 북한 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사회 편입 및 통합이 국제사회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통일연구원이 싱크탱크로 기여해 주길 기대하며, 특히 국제관계 분야에서 전문성을 지닌 외교안보 연구원과 앞으로 긴밀한 협조가 있기를 기대한다.

## ■ 엄종식 (통일부 차관)

먼저 통일연구원 개원20주년을 축하한다. 통일연구원이 인력이나 재정 등 여러 가지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국제적으로 통일에 관한 가장 권위 있는 통일연구기관으로 발전해왔고, 최근 서재진 원장의 리더십 하에서 국책기관 연구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높이 평가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통일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와 이에 관련된 통일연구원의 역할에 대해서는 이상우 의장께서 네 가지 분야에 대해 아주 잘 설명하여 주셨다. 나는 현실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이 부분들에 대하여 몇 가지 보충해서 이야기하겠다.

먼저 통일비용에 관련된 문제를 이야기하겠다. 작년 8.15 경축사에서 통일세가 언급되어서 통일비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과연 통일비용을 논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나는 통일비용이란 생각하기에 따라 다 다르다고 생각한다. 어떠한 가정과 전제 하에서 통일의 기간을 얼마로, 십년, 이십년, 삼십년으로 정하는가, 그리고 통일이 되었을 때에 북한주민의 생활수준을 우리의 10, 30%, 혹은 50%로 보느냐에 따라 통일비용이란 천차만별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비용 논의의 의미가 의문시 된다. 과거의 통일비용 논의는 오히려 통일문제를 회피하게 하고, 비용으로 인해 통일에 대해 무관심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고 생각한다. 통일은 비용문제가 아니라 인권과 자유의 문제고, 우리의 미래에 관한 문제다. 작년 2월에 독일 쾰러 대통령이 한국에 와서 한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었다. 쾰러 대통령은 “많은 한국 사람들이 통일의 재정적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비용문제로 다른 결정적인 점을 보지 못해서는 안 된다. 즉, 유럽심장부에서 평화와 자유를 누리고 산다는 사실은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독일통일로 1,700만 명의 동독주민이 수십 년의 독재를 뒤로하고 안정적인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 살 수 있게 되었고, 유럽분단이 종식되어 냉전이 전쟁으로 번질 수 있는 위험이 사라졌다”라고 이야기했다. 나도 같은 생각이다. 통일이란 비용문제를 뛰어넘는 것이고, 그렇기에 통일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가 얼마나 사전 준비를 잘하고, 제도적 장비 및 전략을 마련하느냐에 성패가 달려있다고 생각이 된다. 그런 점에서 이상우 위원장께서 중장기 전략과 제도통합이 중요하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나도 이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통일연구원이 통일비용을 줄일 수 있는 최고의 지혜로운 전략들을 많이 개발해주기를 부탁한다.

두 번째로는 통일대비에 있어서 국민적 합의, 국민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겠다. 이상우 위원장께서 정치 지도자들이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통일이란 물론 국제적 협력도 중요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선택이다. 독일 통일과정을 보면 결국 동독주민의 시위와 1990년 3월의 선거, 그리고 동서독 주민의 합동 선거가 중요했다. 동독주민이 어떤 체제를 선택하느냐, 그리고 정치권에서, 정당에서 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수용하느냐에 따라 통일 속도가 결정됐다. 당시 10년, 20년을 상상했던 통일 프로세스가 동독주민들의 열망으로 1년으로 줄어들었다. 최근에 국회대표단이 독일에 방문해서 들은 독일 연방내무차관이 한 이야기를 옮긴다면, “동서독 통일은 정부가 주도한 것이 아니다. 여기에는 자유에 대한 동독 국민들의 열망, 통일에 대한 염원, 사회적 합의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서독주민도 재건비용 감당 등 연대의식으로 통일문제에 접근했다.”

그리고 독일 연방재무차관도 동독선거, 합동선거로 동서독 국민의 공감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나도 이에 동의한다. 결국 북한 주민이 남한 체제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상황이 왔을 때 남한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고, 한반도 남쪽 우리 국민들 간의 남남갈등 등 갈등의 요소가 최소화되어야 통일 프로세스가 원활해진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북한 당국에 대해서는 근본적 태도변화를 요구하되 주민에게는 분리접근해서 직접 다가가는 우선 접근 전략을 추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통일연구원에서 이러한 정치프로세스, 국민들의 국민합의 등에 대해 연구를 수행하면 좋겠다.

끝으로, 현재 통일 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먼 이야기 같지만, 지금 이 현실에서 해야 할 것이 두 가지라고 본다. 하나는, 탈북자 정착지원이다. 지금 2만 명이 넘는 탈북자라는 체제와 이념과 생활방식이 전혀 다른 이들이 우리사회에 와서 통일을 시험하고 있다. 이들을 우리가 잘 관리하느냐 못하느냐가 바로 우리의 통일대비 역량의 리트머스 시험지이다. 나는 최근 부산을 방문했다. 부산에는 탈북자 700명이 있다. 이들 중 정규직 노동자는 20%가 넘지 않는 것 같다. 이는 통일부의 책임이지만, 이들이 기존의 사회 안전망, 복지, 생계급여 등에 안주해서 우리사회에 정착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총체적으로 우리가 이탈주민재단을 만들어 노력을 하고 있지만, 통일을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탈북자에 대한 정착지원을 더욱더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둘째로 이상우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통일 교육문제이다. 나는 최근 서서울 생활과학고라는 통일관을 방문했는데, 그곳에서는 북한 관련 각종 전시물을 보여주고 중고등학생들이 매년 만 명씩 오고간다. 금년 들어 서울시청 통일 안보체험행사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다. 그래서 중고등학생들이 여기에 오지 못하게 되었다. 천안함, 연평도 사건을 통해서 젊은이들의 안보의식을 고취시키고 통일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하는 현 상황에서 우리 젊은 세대에 대한 통일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각한다. 마침 통일연구원은 통일교

육원과 나란히 위치해 있다. 통일연구원에서 통일교육 콘텐츠 개발에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도 기여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 ■ 강호인 (기획재정부 차관보)

화사한 봄과 함께 맞이하게 된 통일연구원의 개원 20주년을 축하한다. 사람에 비교하면 어느새 건장한 청년이 되어 가장 활력 있는 시기를 맞이하게 된 것 같다. 통일연구원은 기획재정부와도 남다른 인연을 맺고 있다. 통일연구원은 북한 리스크에 대해 국제신용평가사들의 질문에 정치외교적인 논리를 잘 제공해줌으로서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유지하는데도 많은 기여를 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뜻을 전한다. 지난해 통일연구원은 독일통일 20년 평가 작업을 주관하면서 우리의 통일정책 패러다임을 분단관리에서 통일대비로 전환하기 위한 범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올해에는 남북공동체 기반조성을 위한 분야별 연구와 사회적 공론화 사업을 총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고, 좋은 결실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오늘날 한반도 상황과 미래에 관해서 제 짧은 소견을 말씀드리고자한다. 남북한은 같은 언어를 쓰는 한 핏줄, 한 민족이지만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로 인해 한 지붕 아래 두 가족으로 나뉘어 지내고 있다. 이런 상황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 젊은 세대 일각에서는 통일보다는 이대호가 좋다는 시각이 보이기도 한다. 무척 아쉬운 대목이지만 아마도 통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부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이 두 가족이 벽을 허물고 한 가족으로 지낸다면 지금보다는 한반도 발전에 엄청난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믿는다. 이미 우리나라는 한반도의 반쪽만으로도 잿더미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구어낸 경험을 갖고 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변모하였다. 작년에는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였고 내년에는 핵안보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으로, 세계 경제와 안보 두 축에서 중요한 기여를 해오고 있다. 한 가족이 되는 통일한국은 8,000만 인구가 되어서 세계 15위권 국가가 된다. 우리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자원과 노동력을 결합하는 상호보완적인 의미 있는 경제를 이루게 된다. 나아가 핵비확산, 인권 등 보편적인 이슈를 해결해서, 국제무대에서 위상도 한층 더 높아질 것이라 믿는다.

헬무트 콜 전 독일 총리도 통일 이후 언론 인터뷰에서 “나도 이렇게 빨리 통일 될 줄은 몰랐다”고 고백한 바가 있지만, 우리로서는 언제 어떻게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더라도 통일이 미래의 국운 융성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차분하고 면밀하게 준비해나가야겠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표적인 통일 분야 국책싱크탱크의 역할과 발전방향을 짚는 오늘 이 자리는 매우 뜻 깊다고 생각한다. 나는 우리나라의 경제와 재정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의 시각에서 통일연구원의 역할에 대해 네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첫째로, 통일을 한국경제의 새로운 도약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북한경제에 대한 연구 분석에도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기를 바란다. 독일통일의 사례를 보면 정치적 고려에 따른 화폐통합이나 임금균등화 정책 등이 결국 동독경제에 어려움을 가중시켰고, 그만큼 복지 분야의 재정지출도 눈덩이처럼 증가해서 국가경제에 커다란 부담이 된 것이 사실이다. 그 당시 경제통합 작업에 참여했던 서독 관료들은 통일 전에 자신들이 동독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동독을 너무나 몰랐다고 고백했다. 우리가 유념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한다. 둘째로, 통일연구원이 통일과 북한관련 국내의 연구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각계 유관기관과 공유하는 정보시스템의 허브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이듯이 아무리 훌륭한 연구 성과도 잘 관리되지 않고 수요자에게 제때 제공되지 않는다면 그 의미는 반감되고 말 것이다. 세 번째로, 통일연구원이 통일교육원과 함께 사회 각 분야에 북한전문가

양성을 위해 중추적 역할을 강화해주길 바란다. 통일은 단지 제도적 통합만을 뜻하지 않는다. 사회 전 분야에서 기능적이고 화학적인 융합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독일 통일사례에서도 잘 나타난다. 최근 독일의 여론조사에 따른 동서독 지역주민이 느끼는 이질감, 빈부격차로 인한 위화감 등은 아직도 극복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고 한다. 따라서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별 전문가를 양성하고 관리하는 것은 남북한의 균형 잡힌 통합을 촉진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통일의 당위성과 편익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계량화된 자료들을 많이 발굴하고 제시해줄 것을 당부한다. 현재 진행 중인 남북 공동체 기반 조성사업과도 관련이 있겠지만 외국인을 포함하여 누구나 쉽게 보고 이해하도록 구체적이고 손에 잡히는 내용으로 정리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나는 통일연구원이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더 중요하고 의미 있는 역할을 지속해나갈 것으로 믿는다. 기획재정부로서도 산업계, 학계, 민간,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북한경제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 ■ 문창극 (중앙일보 대기자)

앞서 정부측 토론자들이 통일연구원을 격려해주었지만, 나는 직업이 기자이기 때문에 비판을 하는 방향으로 나가겠다. 큰 비판은 아니고 내 느낌을 말하겠다. 농림부에 잠사에 관련된 연구소가 있었다. 몇 년 전까지 있다가 지금은 없어졌을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비단을 만드는 것과 관련된 기구다. 당시 우리나라 농민이 총 생산하는 비단 값어치가 200여억 원이 넘었다. 그런데 농림부의 관리 및 잠사 연구원등의 월급으로 나가는 인건비와 같은 잠사를 위한 농림부의 예산은 총 생산되는 잠사의 값보다도 많은 250억이 훨씬 넘었다. 이는 농림부가 농사를 뒤에서 도와준다, 전문

가 지식을 더해준다 하면서 사실은 잠사 생산량보다 더 많은 돈을 지출했다는 것이다.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통일부 혹은 통일연구원이 혹시 잠사 연구원같이 되지 않을까 약간의 우려를 하기 때문이다. 통일은 아직도 멀었고 언제 올지 모르는데, 통일을 앞에 두고 통일을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이 많아지면 안 된다. 이는 다 국민의 돈이다. 통일이 중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통일로 먹고 사는 사람이 많아진다면 사실은 통일과는 아무 관계없이 국민의 세금만 많이 나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

통일연구원의 구체적인 업적이 사실은 많다. 나도 통일연구원 고문으로 있기 때문에 매년 몇 번씩은 연구결과를 같이 듣고, 코멘트도 한다. 그런데 올해가 20주년이라 한 가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이 있다. 연구라는 게 본래 좀 허무한 것 아닌가? 지금까지의 연구를 보면 통일의 과정, 통일을 하려면 1국 2체제가 되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연구는 물론 필요하지만, 공허한 연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통일연구원의 20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연구가 공허하지 않은 연구로 돌아가길 바란다. 공허하지 않은 연구란 무엇인가? 나는 통일을 바라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적을 잘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족을 주장하는 사람은 왜 북한이 적이나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까지 북한은 우리에게 적이다. 적을 잘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적에 대해 파악할게 많다. 북한의 경제, 인구구성, 자원, 국토 등을 자세히 자료로 비추해야 한다. 앞으로의 연구과제는 구름 잡는 연구가 아니라 적의 내막을 아는, 보다 실질적인 면에 치중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둘째로, 북한에 대해서, 통일에 대한 관심이 점점 멀어진다는 이야기들이 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나라는 북한의 30배 이상의 경제력을 가진다. 장래는 10년 내에 50배 이상의 경제력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럼 50배의 경제력을 가진 나라가 50분의 1의 나라를 자연스럽게 흡수할거라 생각한다. 한 쪽은 점점 꽃이 피지도 못하고 시들어져 말라 떨어지고, 한 쪽은 굉장히 커지고 있기에, 이 말라 비틀어지는 나라가 당연히 커지는

쪽으로 옮겨오는 것이다. 앞으로 통일의 방향은 여러 논의를 할 것이 아니라, 흡수통일을 하되, 북한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원하게 만들어줘야 한다. 이는 즉 “한국이 아니면 북한은 살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북한이 점점 깨달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나는 종속이론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남북관계에서는 종속이론이 적용되어야 한다. 한국에 북한이 종속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 경제, 인구, 사상, 문화적으로 북한이 한국에 종속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런 것을 통일연구원에서 많이 연구해주길 바란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실질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관념적인 것이 아닌 실질적인 것을 연구했으면 한다.

셋째로, 앞의 발표들 중에서도 탈북자를 잘 도와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나는 앞으로 북한이 허점을 보이는 곳은 두만강, 압록강변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의외로 평양 시내가 취약하다고 본다. 평양시내에 있는 사람들은 엘리트층이기 때문에 바깥사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알고, 전자기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평양 시내가 정보 봉쇄에 의외로 취약할 수 있다. 그리고 국경지역인 두만강, 압록강을 잘 관리해서 한국의 경제·문화·사상이 두만강과 압록강으로 넘어가고 삼투되도록, 그리고 북한 엘리트층을 대상으로, 엘리트가 스스로 한국 문화와 경제에 완전히 종속되게 하려면 어떻게 할지를 연구해주길 바란다. 우리가 북한사람을 설득해야 한다. 나는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통일이 안 된다고 본다. 한편으로는 북한사람들이 남한을 좀 겁내야 한다. 또한 북한 엘리트들이 ‘내가 이런 식으로 인권을 짓밟고 독재자의 하수인 노릇을 하면 통일이 된 뒤에 나는 분명 사형당하겠구나’하는 무서움을 느끼게 해줘야 한다. 북한에 당근과 채찍을 줘야한다. 국민들에게는 당근을, 엘리트에게는 위협을 느껴 함부로 못하게 채찍을 주는 방안을 연구하길 바란다. 그것이 실질적인 것이라 생각한다. 예를 들면, 처형자 명단 발표 등이 있다. 정부에서 발표를 못하면, 예를 들어 북한군 대령 이상은 앞으로 통일되면 처형 대상이라고 발표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국민들에게는 통일이 되면

일 년 내내 쌀밥을 의무적으로 먹여주고, 최소한 교육학교 교육을 해준다는 등 당근을 쥐야 한다. 막연히 앉아서 공허한 통일이론을 이야기하면 안 된다.

마지막으로, 한국국민들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이상우 선생님께서 지금 세대는 통일에 관심도 없고 필요성을 못 느끼는 분위기에 있다고 이야기 했다. 사실 남쪽으로서도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북한 없이도 각자 먹고 살만한 이들을 설득해야한다. 방법은 비전제시이다. 통일연구원에서 장래 연구에 있어서는 통일이 되면 어떤, 얼마나 좋은 나라가 될지, 구체적으로 개개인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지를 연구해주길 바란다. 우리의 생각은 현실에 의해 바뀔 수 있다. 신세대들은 60년 이상의 현실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생각이 현실을 바꾸게 해야 한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 현실이 바뀔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비전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이 비전으로 신세대들이 통일은 북한뿐 아니라 나 개인에게도 절실한 것이라는 자각이 생기도록 통일연구원이 진력해주시기를 바란다.

## ■ 김창기 (월간조선 사장)

내가 통일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을 접한 첫 걸음은 바로 이상우 위원장께서 1987년에 엮어서 펴내고, 이홍구 전총리, 김학준 교수, 노재봉 교수, 진덕규 교수 등의 공동 집필자가 참여한 『통일한국의 모색: 이념, 학문과 정책적 노력』이라는 책을 통해서였다. 외교부와 통일부를 출입하고 있을 당시 이 책을 접하면서 나의 통일관에 큰 영향을 받았다. 오늘 이 분들과 함께 토론을 하여 개인적으로 감개무량하다. 나는 이상우 위원장의 기제발표 중에서 국민의 통일의식을 통일해야하는 과업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통일연구원이 할 일이 많겠지만 우선 통일교



육의 내용 개발을 통일연구원이 맡아야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이상우 위원장께서 말하였다.

나는 통일에 관해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보다 통일에 대한 개념부터 제대로 정립되어있지 않다는 점이라고 본다. 통일이란 말 그래도 하나가 되는 것인데, 우리 사회에는 연방제 통일론, 남과 북이 따로 지내는 방법의 통일 등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꽤 많다. 그러나 공존은 통일이 아니다. 지금 공존론은 통일지향적인 것으로 인식이 되고, 반대로 흡수통일론을 펴면 오히려 반통일적인 사람으로 매도되는 것 같은 현상이 있어서 우려를 하고 있다. 평화가 중요하지만 평화를 중시하면 통일은 멀어질 수도 있다는 단순한 진리를 잃어버리는 경향이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다. 물론 평화를 깨더라도 통일을 추구하자는 말이 아니다. 그러나 평화는 당면목표일 수 있지만 평화공존은 통일의 기피 내지는 반통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국민들한테 좀 더 강력하게 인식을 시켜야한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로, 이상우 위원장께서도 발표한 것처럼 왜 통일해야 하나의 문제이다. 좀 전에 문창극 대기자께서도 이야기했지만, 통일의 당위성에 대해 좀 더 강력한 국민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통일의 당위성이 강력하게 제시되어야만 통일을 준비해야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지난 여름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통일세 문제를 거론했지만 제대로 공론화되지 못하고 실종되었다. 나는 아쉬운 정도가 아니라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여러 접근론이 있을 수 있었기에 어떤 형태로든 좀 더 공론화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만약 예기치 못하게 통일의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그런 기회를 방해하거나 막으려고 나서는 반동세력, 또 분파주의가 있을 수 있다. 이를 적절히 제어하기 위해서도 평소에 통일의 당위성이 좀 더 강력하고 널리 교육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전술적인 부분까지 감안해서 통일연구원이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이론을 잘 세워야 한다. 물론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사회교육차원에서도 폭넓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통일연구원의 본연의 임무에 대한 나의 의견이다. 흔히 통일방안의 연구, 통일로드맵을 연구하자는 이야기들을 많이 한다. 로드맵의 의미는 무엇인가? 로드맵이란, 이 길로 쭉 나가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통일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는 뜻이다. 통일의 실현을 위한 기획, 통일을 향한 설계도, 청사진을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런 접근도 의미는 있으나 그 효용성은 제한적일 수 있다. 왜냐하면 설계도에 따라 통일이 과연 실행될지는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런 설계도에 따라서 통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대단히 긴 시일을 요할 것이고, 어쩌면 그런 그림대로 이루어지는 통일이란 우리 머릿속의 희망사항일 뿐이지 현실사회에서는 영영불가능한 일일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한다. 왜냐하면 세상 일이라는 것이 우리의 의도와 기획대로 전개되지 않기 때문이다. 설계가 아니고 예측을 해본다면, 예측도 의미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정확히 맞추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무엇을 연구해야 할 것인가?

나는 우리의 의지나 희망에 관계없이 발생하는 돌발 사태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상할 수 있거나 심지어 예상조차 할 수 없는 돌발사태의 가능성에 대해서 연구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호사자들의 예언이나 지적호기심 차원의 시나리오를 연구해보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 군대가 평시 훈련으로 유사시에 대비하듯이 우리가 긴급 상황에서 유한한 자원을 최적배분하고, 동원 가능한 안팎의 여러 수단들을 휴면 상태에 놓아두지 않고 활성화된 상태로 예비해두며 돌발 상황에 대한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 또 통일연구원이 국책연구기관으로서 통일문제에 관한 여러 연구기관들의 조정역할을 좀 더 강화하기를 희망한다. 정부 부서들 간에 군사적, 외교적 여러 비밀연구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이런 비밀연구들까지 포함하여 부처 간 조정이 필요할 때 통일연구원이 허브역

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한 가지 염려가 되는 것은, 통일연구원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의 독립된 연구기관으로서 통일연구원의 위상에서 가령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등 여러 부처들의 연구활동을 중심에서 조정할 수 있는 위상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이 위원장님 발표 중에 보면 ‘점진적’ 통일에 대한 내용이 있다. 물론 이것은 바람직한 최상의 상태이지만, 아까도 언급했듯이 상황은 우리가 대비하지 못한 방향으로 흡수통일이 전개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는가? 따라서 점진적 통일론만으로는 준비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 위원장은 2국2제에서 2국1제로 다시 1국1제로 가는 것이 유일한 길이라고 발표하였는데, 이는 점진적 통일의 시나리오이다. 그런데 돌발사태로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 그럴 경우, 나는 2국2제에서 1국2제를 거쳐서 1국1제를 가는 일도 있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한다. 말하자면 정치적인 주권은 한국경제로 완전히 통합하고 일원화 시켰지만, 행정적·경제적 차원에서는 다른 형태의 통치가 전개되는 식의 1국2제가 과도적으로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한다.

## ■ 길정우 (전 중앙데일리 발행인)

통일연구원의 20년 전 출범당시의 이름은 ‘민족통일연구원’이다. ‘민족통일연구원’에서 ‘민족’이 왜 빠졌는지는 모르겠지만 민족통일연구원(RINU)의 20년 전 출범 당시에 현실과 이론으로 무장한 노련한 원장과 부원장의 경륜에 힘입어 젊은 박사들이 활력적으로 전문지식을 축적하며 배우고 일할 수 있었다. 새로운 정책연구소를 기획했던 이들은 그 당시로서 머지않은 장래에 북한문제가 우리 한반도와 한민족의 장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 예측했던 것 같다.

출범 2년이 채 되지 않은 1993년 초 북한 핵문제가 불거지고, 이후

2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난 지금 우리 뿐 아니라 국제사회가 이 문제를 놓고 여전히 씨름하고 있다. 한국의 대외관계에서 상대적으로 경시되던 남북문제가 언제부터인가 대외관계의 중심에 자리 잡았다. 국제사회가 관심을 갖는 대량살상무기 문제가 전면에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 외교력의 상당부분을 북한과 관련한 문제에 소모하고 있다. 분단해소 혹은 통일의 그날까지 이 같은 국가의 외교력 소모양상은 지속될 것이다.

국력 소모의 내부적 여건은 바깥세상에서의 냉전종식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선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 달라진 현상이라면 더 이상 북한이 한국과 상대하는데 있어 자신들의 국력 소모를 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이다. 그러나 한국은 (민주사회의 대가일는지 모르나) 북한에 대한 인식, 분단해소의 방법론, 남북관계 관리 등에 있어 한국 사회 내 의견수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동안 북한의 핵무기 개발, 식량부족으로 인한 인민들의 기아, 세대 3대 세습과정, 대남 무력도발 등을 지켜보면서 한국 내 북한을 보는 인식에 변화가 있었다곤 하지만 소위 '남남갈등'이 해소되기까지 상당기간이 필요할 것 같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를 개발,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한국에 대한 심각한 실재적 위협으로 생각지 않는 이들이 여전히 많은 건, 현실인식에 있어 한국사회의 착각 혹은 혼돈을 말해주고 있다. 천안함 사태, 연평도 도발 등을 경험하고 순간적으로는 분노하면서도 이내 일상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우리의 무감각, 안이함이라 해야 할지, 아니면 별달리 현실적 대안이 없기 때문에 오는 일종의 좌절감일지 잘 모르겠다.

국민들이 이렇다면 과연 남북문제를 분석·연구하고 정책을 만들어 내는 전문인 집단은 어떠한가. 크게 변하지 않은 북한, 갑자기 달라질 절대절명의 이유가 없는 연구과제, 다양한 상황에 대해 크게 다르지 않은 정책대안을 낼 수밖에 없는 연구와 정책환경 속에서 통일연구원이 성장해 왔다. 같은 분야를 대상으로 일하는 여타 전문인 집단도 크게 다르지 않다.

우리가, 그리고 주변에서 얼마나 자주 우리의 통일정책 패러다임을 새롭게 짜야 한다고 주장해 왔는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연구의 초점 뿐 아니라 정책보고서의 성향도 조정해야 하는 여건변화의 널뛰기 속에서도 상황분석에 대한 전문지식과 현실감 있는 정책제안을 낼 수 있는 경륜이 축적된 통일연구원의 전문 인력에 대해 우리 정부와 사회의 관심이 얼마나 있었는가. 북한을 상대하고 북한을 연구하는 이들 모두가 많이 지쳐있다. 이는 한국 뿐 아니라 미국, 일본 등에서 북한을 관찰하고 연구하는 전문인들 거의 대부분이 경험하고 있는 현상이다. North Korea Fatigue(북한연구 피로증상)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우리가 얘기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통일정책도 가능하고 새로운 시각의 대북접근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통일연구원에 주어진 과제, 혹은 연구원이 답을 찾아야 할 문제들은 우리 사회 전체가 안고 있고 또 직면하게 될 문제들이다. 남들이 무시하고 무관심하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문제와 상황들에 대해 '정답 없는 모범 답안'을 찾기 위해 지난 20년을 한 방향으로 뛰어 온 곳이 통일연구원이다. 남들은 '미래'라고 생각하는 통일을 '오늘'이라 여기며 가급적 긴장을 늦추지 않고 연구와 정책대안 제시에 진력해 온 곳이 통일연구원이다. 40여 명의 박사들이 각자 이념적 성향에서 차이를 보인다 하더라도, 적어도 연구와 분석의 공정성과 정책의 현실성이란 엄중한 잣대만큼은 포기하지 않고 지켜온 연구기관이 통일연구원이다. 국내 수많은 정책연구기관이 있지만 이처럼 이념과 성향의 결코 좁지 않은 스펙트럼을 좁혀보려고 애써가며 연구결과를 내고 정책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조직은 흔치 않다고 생각한다. 그만큼 연구인력 개개인이 그리고 원장이나 실장, 팀장들의 고민은 깊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20년의 세월이 지난 연구원의 장래를 위해 몇 가지 제언하고 싶다. 연구원의 장래는 분단 한국의 원만한 통일을 위한 방도와도 직접·간접적으로 맥을 함께 하고 있다.

첫째, 통일연구원은 통일에 이르는 과정, 그 과정에서 제기될 수많은

문제들에 대한 답을 찾는 작업 뿐 아니라 통일 이후 통일한국이 직면할 문제들을 정리하고 또 답을 찾는 노력도 해야 한다. 분단해소와 통일이란 현상 혹은 사건, 사태 뿐 아니라 남북한 간에 무력대결을 벌이지 않고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상황을 전제로 제기될 적지 않은 문제와 도전들에 대해 답을 찾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분위기에서는 쉽게 상정하기 힘든 여건을 전제로 벌어질 상황을 상상해 보는 지적인 작업과 노력이 때로는 출구 없는 현재에서 벗어나는 지혜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본다.

둘째, 연구원들의 피로증상을 해소하고 안목을 넓히기 위한 대안으로 정부부처와 해외 공관에 연구원의 전문 인력을 일정 기간 파견 근무시키는 방안을 추진했으면 한다. 국내 정부부처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하지만 분단해소와 통일준비에 정부 부처 간 벽은 없어야 한다. 동일한 문제를 다르게 접근하는 각 부처의 입장을 이해하는 과정이 연구원의 전문 인력에겐 필요한 자산이다. 아울러 해외 주요공관에서 공관장을 자문하며 현지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이나 전문가의 견해를 적절히 피력하는 과정은 통일외교의 중요한 일부분이라 생각한다. 통일한국이 직면할 외교영역에서의 자질과 경륜 역시 이 과정에서 길러질 수 있다고 본다. 통일외교란 전 세계에서 한국만이 갖고 있는 외교의 중요한 영역이 되었다.

셋째, 통일교육 뿐 아니라 일반 정규교육 과정에서의 사회교육 콘텐츠를 재점검하되 방향성과 더불어 교육의 방식까지 폭넓게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통일연구원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의 사회교육과 나아가 통일교육의 핵심은 무엇일까. ‘애국심’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나와 생각을 달리하는 이들, 또 나와 다른 체험공간에서 살아 온 이들과 더불어 살 수 있다는 ‘공동체 정신’이라고 본다. 이 둘을 어떻게 조합하여 대상에 따라 그 수준을 달리 하며 현실감 있는 내용으로 채울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남북관계는 ‘인내심’의 게임이다. ‘인내’(patience), ‘끈기’(perseverance)와 ‘탄력’(resilience) 모두 필요한 게임이다. 그리고 다름을 인정하는 ‘용인’(tolerance)의 게임이다. 이런 과정에서 통일과 통합의 의미를 배우고 공동체 정신을 키운다. 통일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뜻은 북한의 예기치 않은 상황에 대한 대비 뿐 아니라 변화하는 한국 국민들의 정서와 기대에 부응하는 분단관리와 평화정착의 새로운 방식과 시도까지를 포함한다고 생각한다. 실제 없는 국가이익에 대해 피부에 와 닿는 생명감을 불어넣고 애국심에 불을 지피며, 그 애국심에 방향성을 부여하는 사회운동이 내실화될 때 비로소 통일을 향한 의미 있는 작업에 추동력이 생겨날 것이다. 또 그래야 분단해소 과정에서 불필요한 국내 논란과 국력 낭비를 줄이고 통일된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존경받는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한 수많은 과제들이 통일 일꾼들에게 부여된 역사적 사명이다. 그리고 통일연구원은 지난 20년간의 학문적 연구와 지적인 고민을 바탕으로 그 사명을 충실하게 이행해 갈 것이라 믿는다. 아울러 개원 초기부터 4년 반이란 세월을 통일연구원의 연구조정실장과 정책연구실장으로 재직했던 저 자신의 경험에 대한 자긍심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다. 또 다른 20년을 준비하면서 통일연구원이 또 다른 장래에 ‘통일한국연구원’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지난 20년이란 결코 짧지 않은 세월 동안 통일 역꾼으로 통일연구에 매진해오신 모든 가족 여러분 수고하셨다.

## ■ 허문영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민족통일연구원이 출범할 수 있도록 크게 기여해주신 이흥구 전 총리께 다시금 감사를 전하고, 또 통일연구원이 이 연구로 들어서는 과정에서 많은 가르침을 주신 존경하는 이상우 위원장님, 김학준 고문님과 함께

오늘 20년 만에 이런 자리에서 다시금 통일연구원의 방향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갖게 된 것을 감사드린다. 또 정말 바쁘신 시간에 오셔서 토론해 주신 차관님들, 대기자님, 사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저희들 연구가 오늘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을 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통일연구원이 지난 20년간 연구해온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분단의 평화적 관리와 통일준비 연구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방점이 분단의 평화적 관리에 조금 더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2007년 북한의 핵실험 이후, 통일연구원 내부에서는 격렬한 토론과정을 거쳐 한반도의 평화적 관리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평화통일을 실천해나가야 할 때가 되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그리고 연구방향이 분단관리에서 통일실천의 방향으로 큰 흐름이 바뀌었다. 그 과정에서 연구진들 사이에 많은 격론이 있었는데, 오늘 발제해주신 이상우 위원장님의 말씀과 토론을 정리해보니, 저희들이 하는 이야기하고 상당히 비슷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제가 이상우 위원장님의 통일한국의 모색이라는 책을 보고 공부했다. 과거에 위원장님이 한반도 통일에 있어 세 가지 변인, 즉 우리의 능력, 의지, 환경(국제환경)이 결정적이라고 하셨다. 이 세 가지를 지금의 시점에서 보면 아직도 여러 부분에서 부족하다고 판단 된다. 통일연구원이 앞으로 해 나가야 할 일들에 있어서, 오늘 박석환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통일을 위한 우리 능력의 제고와 주변국가와의 이해 조정, 엄종식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의지제고를 위한 통일 교육 등 많은 내용들이 다 연결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 통일연구원은 오늘의 토론내용을 가지고 잘 녹여서 연구를 감당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또 아까 통일을 가지고 밥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셔서 마음이 흠칫했다. 밥충이가 되어서는 안 될텐데 하는 마음이 들었다. 그러나 분명히 자신 있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1994년 7월 8일 김일성 사망 시, 3분 붕괴설부터 석 달, 제일 늦게 보는 분들이 3년 내에 김정일 정권이 무너진다



고 이야기 했다. 제 기억에는 당시의 95% 이상이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러나 통일연구원은 그렇지 않다고 보았다. 당시 통일연구원이 1991년에 창설되어 3년 밖에 되지 않았지만, 김정일 정권은 생각보다는 단단하고 알잡아봐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젊은 연구원들이 밤을 세면서 북한체제를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과학적이고 실증적으로 연구한 결과였다. 우리들이 분명히 지금도 자랑스럽게 내놓고 싶은 연구 결과이다. 둘째는 2000년대 들어와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고 많은 이들이 가벼운 통일의 열망에 들떠있었지만 우리들은 북한이 대포동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는 정책보고서도 올린 적이 있다. 비판을 받아도 그리했다. 핵도 실험할 수 있으니 정부가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서를 올린 적이 있다. 그 당시에 지나간 이야기를 드리니까 좀 죄송하긴 하지만, 어떻게 이런 정신없는 보고서가 나오느냐는 비판도 받은 적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계속 정책보고서를 올렸다. 후에 북한은 미사일을 쏘았고, 그 후 우리는 그 다음 단계인 핵실험도 할 수 있기에 이를 못하게끔 일련의 대책을 정부가 추진해야 한다는 정책건의서를 올렸다. 연구원은 거기까지이다. 보고서를 받아서 집행하는 분들이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연구원은 그 이상 할 힘이 없다. 두 번째는 핵실험을 하게 되면 그 뒤늦게라도 이런저런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정책보고서를 2007년에 올렸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다.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주신 통일연구원에서 저희들이 그러한 연구를 했기 때문에 과거 20년의 연구결과에 자부심을 갖고 국민여러분께 보고를 드리고 싶다.

앞으로 통일의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이상우 위원장님께서서는 통일이 70년이 걸릴 것이라고 이야기하셨다. 1945년부터 시작된 우리나라의 분단은 1948년 체제분단과 1953년 한국전쟁의 종료로 민족분단까지 3중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 또한 완전 통일이 되려면 이상우 위원장님께서 발제문에서 이야기하신 70년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말씀대로 1945년 더하기 70년을 해보면 2015년이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목표

의식을 갖고, 북쪽체계를 어떻게 자유화·민주화·시장화 시킬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여기서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들은 이미 그런 연구를 시작하여 진행 중에 있다. 또 저희 동료 연구원 가운데 중국전문가가 말씀해주셨는데, 중국이 44년설을 이야기했다고 한다. 저는 이 한반도의 휴전선은 우리 민족의 분단선이자 세계 패권세력인 미국과 중국의 대결선이고, 해양세력인 미국·일본과 대륙세력인 중국·러시아의 대치선이기 때문에, 우리의 평화통일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주변 4국에도 평화와 상생 번영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통일을 안 이루면 이러한 문제가 계속해서 이 땅에 존재하게 되기 때문에 긴박감을 갖고 북한의 정세연구와 함께 계속해서 통일연구를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런 맥락에서 큰 말씀만 드리면, 통일대계연구, 즉 ‘대전략’(Grand Strategy) 연구는 이미 시작되었다. 어느 나라에서 들은 말 때문에 매우 마음이 아팠다. 그들이 우리의 햇볕정책을 평가하며 햇볕정책은 정책이 아니라 ‘전술’(tactics)에 불과하다고 한 것이다. ‘전술’(tactics) 위에 ‘전략’(strategy)이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전략가’(Grand Master)들이 있어서, 헨리 키신저, 브레진스키, 헌팅턴 등과 같은 인물들이 짜는 ‘대전략’(Grand Strategy)이 있다. 저희 통일연구원은 거기까지 연구를 할 각오로 지금 통일대계연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또 북한에 대해 각론적 연구도 깊이 연구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엄종식 차관이 계시는 통일부에서 북한 정세지수 연구를 대대적으로 지원을 해주셔서 심도 있는 연구를 시작했다. 작년부터 30명 이상의 박사들이 달라붙어서 북한연구에 대해 각론적으로 깊이 들어가서 연구하고 있다는 보고도 드리고 싶다. 또 통일교육, 콘텐츠 관련해서도 작년부터 본격적 연구를 심화시키고 있고, 국제협력에 있어서도 1.5트랙대화가 잘 진행이 되어가고 있다. 그래서 발제해주신 이 위원장님의 말씀에 따라서 보면 능력과 의지, 환경이 지금은 아직도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으나, 이 세 가지의

수준을 올리기 위해 통일연구원은 계속 매진할 것이고, 오늘 토론해주신 말씀들을 저희가 잘 정리해서 꼭 반영할 것이다. 한 가지 부탁이 있다. 제가 오늘 놀랍고 감사했던 것은, 기획재정부 차관보님이 오셔서 통일부를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해주신 것이다.

또 제가 정말 존경하는 김학준 사장님께서 통일연구원의 어려움을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다. 저는 기획재정부 차관보님께서 이런 것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저희 연구원에 박사가 30명밖에 안 된다. 제가 기조실장을 하는 동안에 다른 연구원의 박사 숫자를 들어봤더니 어느 연구원은 120명이라고 한다. 그 한 연구원의 숫자가 그런데 통일연구원은 박사가 30명밖에 안 된다. 통일연구원이 정말 통일을 준비해가고 만들어 가려면 다양한 연구를 하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 감당할 수 있게끔 일년 평균 박사 10명씩, 그래서 2020년까지 100명은 만들어 주십사하고 부탁드린다.

그리고 통일연구원의 위상에 대해서 말씀하신 김창기 사장님께 정말 감사드린다. 우리 통일연구원이 진정 제대로 된 연구를 하려면 청와대 밑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청와대에 NSC가 강화되어야 한다. 그래서 NSC는 집행하는 기관이 아닌 기획재정부, 통일부, 외교통상부, 국방부, 국정원 등 이 모든 부처를 코디네이션 하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인치가 아닌 제도치를 확립하여 각 부처에서 올라오는 성과를 종합시켜 이제부터 10년에서 15년, 20년간은 대한민국 통일정책에 일관성을 가지며 기조연설 해주신 이홍구 총리님의 말씀대로 평화의 통일정책이라는 기조는 그대로 가되, 문창국 대기자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상황에 따라 채찍과 당근을 사용하여야 한다. 평화통일정책은 그대로 가되, 채찍과 정책을 병행하는, 그러면서 정부정책은 정권에 상관없이 일관성을 갖도록 NSC가 재정립 되어야 한다. 통일연구원이 NSC 밑으로 가서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보고서, 각 부서 산하 연구원에서 올라오는 보고서를 받아서 잘 정리해서 NSC의 Think Tank가 될 때, 비록 주변국가에서는 한국의 통일정책이 '전술'(tactics)에 불과하다고 비하했지만,

집단 지성을 모아서 ‘대전략’(Grand Strategy)을 만들어 낸다면, 장래 통일한국은 7대 강국이 아니라, 앞으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와 함께 5대 강국에도 들 수 있다. 그 날이 올 때까지 앞으로의 20년의 기간에도 통일연구원이 계속 발전할 수 있게끔 후원, 지원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아까 김학준 고문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울컥했다. ‘남자는 인정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여자는 사랑을 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인생을 바친다’는 말이 있다. 통일연구원은 이렇게 존경하는 위원장님들과 차관님들, 대기자님, 사장님이 사랑해주시고, 오늘 20주년 행사에 오신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연구원의 목숨을 바쳐서 열심히 일 할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토론을 마치고자 한다.



연구총서

2008-01	북한체제의 안정성 평가: 시나리오 워크숍	최진욱 외	9,000원
2008-02	한반도 선진화를 위한 남북 경제관계 발전방안 모색	임강택 외	10,000원
2008-03	남북한 출입제도 [통행·통신·통관] 개선 및 정착 방안 연구	김영운	8,000원
2008-04	전환기 동북아 국가들의 국내정치 변화와 대북전략	배정호 외	10,000원
2008-05	중국의 한·중 FTA 추진의도와 남북관계에 주는 함의	전병곤, 구기보	7,500원
2008-06	한반도 통일 외교 인프라 구축 연구	박영호 외	9,000원
2008-07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	조정아 외	10,000원
2008-08	김정일 정권 등장 이후 북한의 체제유지 정책 고찰과 변화 전망	전현준 외	10,000원
2008-09	이명박정부 대북정책의 추진환경과 정책과제	박형중 외	6,500원
2008-10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전략: 이론과 실제	이금순, 김수암	9,000원
2008-11	North Korea's External Economic Relations	김규륜 편	9,000원
2009-01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 전략적 협력에 관한 연구	전성훈	7,500원
2009-02	세계경제위기와 미·중관계 변화 연구: 북한 핵문제에 미치는 영향	황병덕, 신상진	9,000원
2009-03	북한의 국력 평가 연구	전현준 외	10,000원
2009-04	북한경제의 시장화 실태에 관한 연구	임강택	9,000원
2009-05	21세기 한국의 동아시아국가들과 전략적 협력 강화방안	여인곤 외	10,000원
2009-06	북한체제 전환을 위한 전략적 과제와 한국의 동북아 4국 협력전략	배정호 외	10,000원
2009-07	북한 '변화'의 재평가와 대북정책 방향	박형중 외	10,000원
2009-08	북한 개방 유도 전략: 목표, 기본방향 및 단계별 과제	최진욱 외	10,000원
2009-09	북한주민 인권의식 고취를 위한 전략적 인권외교의 방향	홍우택 외	6,500원
2009-10	통일대비 북한토지제도 개편방향 연구	허문영 외	9,000원
2009-11	북한인권 침해구조 및 개선전략	이금순, 김수암	7,500원
2009-12	통일대계 탐색연구	조민 외	8,000원
2009-13	Modernization and Opening-Up of North Korean Economy: Roles and Efforts of Neighboring Countries	김규륜 외	7,500원
2009-15	Peace-Keeping on the Korean Peninsula: The Role of Commissions	Gabriel Jonsson	20,000원
2010-01	북한 핵 보유 고수 전략의 도전과 대응	박형중 외	9,500원
2010-02	탈사회주의 경제이행 국가의 권력구조 유형과 개혁 경로: 포스트-김정일 체제에 대한 시사점	최진욱, 김진하	8,000원
2010-03	북한 개방화와 인권개선 방안연구	김국신, 김연수, 서보혁	7,000원
2010-04	북한의 체제위기와 사회갈등	조한범, 양문수, 조대엽	7,500원
2010-05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동북아전략 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동북아 4국 통일외교전략	배정호 외	12,500원
2010-06	북한주민 인권의식 실태연구	이금순, 전현준	8,500원
2010-07	라진·선봉지역 물류분야 남북 협력방안 연구	김영운, 추원서, 임을출	8,000원

2010-08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새로운 접근과 추진방안: 3대 공동체 통일구상 중심	박종철 외	11,500원
2010-09	통일한국의 정치체제	허문영 외	6,000원
2010-10	북한 핵에 대한 억지방향 연구	홍우택	5,000원
2010-11	북한의 포스트 김정일체제 전망	정영태 외	11,000원
2010-12	북한 주민의 의식과 정체성: 자아의 독립, 국가의 그늘, 욕망의 부상	조정아 외	17,000원
2010-13	북-중 경제관계와 남북경협에 대한 대북 파급효과 비교분석	최수영	7,500원
2010-14	East Asian Community Building: Issue Areas and Perspectives of Regional Countries	김규륜 외	10,000원
2010-15(I)	신아시아 외교와 새로운 평화의 모색 I	김규륜 외	13,000원
2010-15(II)	신아시아 외교와 새로운 평화의 모색 II	김규륜 외	13,000원

### 학술회의총서

2008-01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 비전 및 추진방향		10,000원
2008-02	The Vision for East Asia in the 21st Century and the Korean Peninsula		9,500원
2009-01	북핵 문제 해결 방향과 북한 체제의 변화 전망		6,500원
2009-02	북핵 일괄타결(Grand Bargain)방안 추진방향		5,500원
2010-01	이명박 정부 2년 대북정책 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		8,000원
2010-02	독일 통일 20년과 한반도 통일비전		6,000원
2010-03	분단관리에서 통일대비로		5,500원
2010-04	독일 통일 20년과 한국의 통일대비		7,000원

### 협동연구총서

2008-07-01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모형개발 및 발전방안 (총괄보고서)	김국신 외	6,500원
2008-07-02	남북 교류협력 효율화를 위한 거버넌스 모형구축	양현모, 이준호	6,000원
2008-07-03	북한의 국가·사회관계와 통일정책 거버넌스	최진욱 외	7,000원
2008-07-04	남북연합 형성·운영의 거버넌스	박종철 외	8,000원
2008-08-01	국제사회의 개발지원 이론과 실제: 북한개발 지원을 위한모색 (총괄보고서)	박형중 외	10,000원
2008-08-02	국제 개발이론 현황	이금순 외	8,000원
2008-08-03	국제사회의 원조 현황 및 추진전략	임강택 외	10,000원
2008-08-04	UN기구의 지원체계와 대북 활동	최춘흠 외	6,500원
2008-08-05	양자간 개발기구의 체계와 활동	권 울 외	10,000원
2008-08-06	다자간 개발기구의 체계 및 활동	장형수 외	10,000원
2008-08-07	국제 NGO의 원조정책과 활동 연구	이종무 외	8,000원
2009-15-01	북한개발지원의 포괄적 추진방안(총괄보고서)	임강택 외	8,500원
2009-15-02	북한개발지원의 이론과 포괄적 전략	박형중 외	10,000원
2009-15-03	북한개발지원의 쟁점과 해결방안	김정수 외	10,000원
2009-15-04	북한개발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장형수 외	10,000원

2009-15-05	북한개발지원체제의 구축방안	이종무 외	9,000원
2009-15-06	지방자치단체의 북한개발지원 전략과 접근방법	양현모 외	10,000원
2009-16-01	복잡계 이론을 통한 북한의 정상국가화 방안 연구(총괄보고서)	김국신 외	6,000원
2009-16-02	북한체제의 행위자와 상호작용	이교덕 외	8,000원
2009-16-03	북한 계획경제의 변화와 시장화	이 석 외	9,000원
2009-16-04	탈냉전 이후 국제관계와 북한의 변화	민병원 외	8,000원
2009-17-01	비핵·개방·3000 구상: 추진전략과 실행계획(총괄보고서)	여인곤 외	7,500원
2009-17-02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및 추진환경과 전략	박종철 외	8,000원
2009-17-03	비핵·개방·3000 구상: 한반도 비핵화 실천방안	조 민 외	9,000원
2009-17-04	비핵·개방·3000 구상: 북한의 개방화 추진방안	함택영 외	7,500원
2009-17-05	비핵·개방·3000 구상: 남북경제공동체 형성방안	조명철 외	7,000원
2009-17-06	비핵·개방·3000 구상: 행복공동체 형성방안	이금순 외	7,500원
2010-14-01	북한정보체계 실태조사(총괄보고서)	황병덕 외	12,000원
2010-14-02	북한정보체계 실태조사(上)	황병덕 외	14,000원
2010-14-03	북한정보체계 실태조사(下)	황병덕 외	13,000원
2010-15-01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통일정책의 세부 실천방안(총괄보고서)	여인곤 외	9,000원
2010-15-02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통일정책의 추진환경 및 전략과 실천방안	박영호 외	9,500원
2010-15-03	이명박 정부 대북통일정책의 세부 실천방안	허문영 외	7,000원
2010-15-04	이명박 정부 외교정책의 세부 실천방안(1): 협력 네트워크 외교 분야	남궁영 외	7,500원
2010-15-05	이명박 정부 외교정책의 세부 실천방안(2): 포괄적 실리외교 분야	전재성 외	9,500원
2010-15-06	이명박 정부 안보정책의 세부 실천방안	이수훈 외	7,500원
2010-16-01	북한의 정상국가화 지원방안 연구(총괄보고서)	이교덕 외	7,000원
2010-16-02	북한의 정치부문 정상국가화 지원방안	전현준 외	7,500원
2010-16-03	북한 시장 진화에 관한 복잡계 시뮬레이션	조정아 외	14,000원
2010-16-04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방향	민병원 외	7,500원

## 논총

통일정책연구, 제17권 1호 (2008)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7, No. 1 (2008)	2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7권 2호 (2008)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7, No. 2 (2008)	2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8권 1호 (2009)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8, No. 1 (2009)	2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8권 2호 (2009)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8, No. 2 (2009)	2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9권 1호 (2010)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9, No. 1 (2010)	2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9권 2호 (2010)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9, No. 2 (2010)	2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0권 1호 (2011)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0, No. 1 (2011)	20,000원



##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08	이금순 외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8</i>	이금순 외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9	이금순 외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9</i>	이금순 외	20,000원
북한인권백서 2010	박영호 외	2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0</i>	박영호 외	20,000원
북한인권백서 2011	박영호 외	17,500원

## 기타

2008	2006 독일통일백서		8,000원
2009	Lee Myung-bak Government's North Korea Policy	Suh, Jae-Jean	5,500원
2009	김정일 현지지도 동향 1994-2008		15,000원
2009	The U.S.-ROK Alliance in the 21st Century	Bae, Jung-Ho, Abraham Denmark	10,000원
2009	북한의 주요현안과 한-미 전략적 공조	배정호	10,000원
2009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에 따른 미-중관계의 변화와 한반도	배정호	10,000원
2010	김정일 현지지도 동향 1994-2009		15,000원
2010	2010 독일통일백서		13,000원
2010	21세기 러시아의 국가전략과 한-러 전략적 동반자관계		10,500원
2010	Russian National Strategy and R.O.K.-Russian Strategic Partnership in the 21st Century		13,500원
2010	NPT 체제와 핵안보		13,000원
2010	Nuclear Security 2012: Challenges of Proliferation and Implication for the Korean Peninsula		15,000원
2010	통일 환경 평가(통일대계 연구 2010-01)	박종철 외	18,000원
2010	통일비전 개발(통일대계 연구 2010-02)	조 민 외	12,000원
2010	독일의 평화통일과 통일독일 20년 발전상(통일대계 연구 2010-03)	황병덕 외	16,000원
2010	사회주의 체제전환 이후 발전상과 한반도통일-중국, 베트남 및 중동부 유럽 국가들의 사회주의 체제전환 중심(통일대계 연구 2010-04)	황병덕 외	15,000원
2010	전환기의 북한과 통일담론(통일대계 연구 2010-05)	배정호 편저	11,000원
2010	한반도 통일과 주변 4국(통일대계 연구 2010-06)	최진욱 편저	11,000원
2010	Korean Unification and the Neighboring Powers(통일대계 연구 2010-07)	최진욱 편저	13,000원

## 연례정세보고서

2008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8~2009	6,000원
2009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9~2010	7,000원
2010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0~2011	7,000원

2008-01	2008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정영태, 김영운, 박영호, 서재진, 임순희, 허문영
2008-02	중국 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 결과분석: 지도부 개편을 중심으로	전병곤
2008-03	최근 북한 권력엘리트 변동 분석	전현준
2008-04	한-미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8-05	이명박 대통령의 방일과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분석	배정호
2008-06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6차 회의 결과분석	최수영
2008-07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유엔인권이사회 보고서 평가	이금순, 김수암
2008-08	2단계 비핵화 이후 북한의 대남정책 전망	최진욱, 박형중
2008-09	남북 이산가족문제: 평가와 향후 정책 방안	임순희
2008-10	상반기(08년 1월~6월) 북한의 대내외 정세 분석	서재진, 정영태, 전현준, 최수영, 최진욱, 임순희, 조정아
2008-11	아소 정권의 출범과 대외전략노선 및 대북전략	배정호
2008-12	한-러 정상회담 결과분석	여인곤
2009-01	2009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최진욱, 전현준, 정영태, 조정아, 최수영, 박영호, 박형중
2009-02	하반기('08년 7월~12월) 북한의 정세 분석	최진욱, 임순희, 전현준, 정영태, 조정아, 최수영
2009-03	북한의 대남 비방 공세의 의도와 전망	최진욱, 전현준, 정영태
2009-04	북한의 제12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결과 분석	전현준
2009-05	2008년 북-중무역의 주요 특징	임강택, 박형중
2009-06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1차 회의 결과 분석	최수영, 정영태
2009-07	한-미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국신
2010-01	2010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임강택 외
2010-02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2차 회의 결과 분석	최수영
2010-03	김정일 방중과 중국의 전략외교	배정호, 박영호, 전병곤
2010-04	2010상반기 북한정세 분석 보고서	정영태, 이교덕, 최수영, 임순희, 조정아
2010-05	독일통일 20주년 조망: 독일통일이 한반도 통일에 주는 시사점	황병덕
2010-06	야로슬라블 한-러 정상회담 결과 분석	여인곤
2010-07	북한 3대 세습 후계구도 분석 및 정책변화 전망	김진하
2011-01	2011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최진욱 외
2011-02	미-중 정상회담의 의미와 한국의 전략적 고려사항	배정호 외
2011-03	2011년 미-중 정상회담 평가: 동북아 및 한반도에의 함의	황병덕 외
2011-04	2009년 헌법 개정 이후 북한 노동법제 동향	이규창
2011-05	최근 북한 주민의 의식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임순희
2011-06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4차 회의 결과 분석	임강택, 최진욱
2011-07	중동 민주화 혁명과 한반도 전략적 함의	배정호, 박영호, 박재적, 이기현
2011-08	북한의 여성권·아동권 관련 법 제정 동향	임순희, 김수암, 이규창
2011-09	상반기 북한정세 분석 보고서	최진욱, 임강택, 임순희, 정영태, 김진하, 한기범

KINU정책연구시리즈

2008-01	남북 상생-공영을 위한 비핵-개방-3000 정책의 이론적 체계: 연구	서재진
2008-02	향후 5년 남북관계 주요 환경과 전개 시나리오	박형중, 허문영, 조 민, 전성훈
2008-03	북한의 기상관리 정책의 변화와 남북한 기상협력 방안연구	최은석, 황재준

2009-01	신평화구상 실현을 위한 전략과 과제	김규륜 외
2009-02(I)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I): 접경지역 평화적 이용을 위한 이론적 검토와 사례연구	손기웅 외
2009-02(II)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II): 접경지역 평화적 이용을 위한 기존제안 검토	손기웅 외
2009-03	대북정책의 대국민 확산방안	조한범 외
2009-04	통일 예측 시계 구축	박영호, 김지희
2009-05	북핵일지 1955-2009	조 민, 김진하
2009-06	미국 대북방송 연구: 운용실태 및 전략을 중심으로	이원웅
2010-01	한반도 녹색성장을 위한 남북한 산림협력 법제 개선방안 예비연구	이규창
2010-02	2010년 통일예측시계	박영호 외
2010-03	북한 경제개발 계획 수립방안 연구: 베트남 사례를 중심으로	임강택
2010-04(III)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III): 정책제안	손기웅 외
2010-04(IV)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IV): 2010년 「코리아 접경포럼」 자료집	손기웅 외
2011-01	재스민혁명의 분석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	박종철 외

###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2008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3권 1호	이금순, 김수암, 임순희
2008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3권 2호	이금순, 김수암
2009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4권 1호	박영호, 이금순, 김수암, 홍우택
2009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4권 2호	박영호, 이금순, 김수암, 홍우택
2010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5권 1호	김국신, 김영운, 전현준, 이금순, 이규창
2010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5권 2호	김국신, 전현준, 이금순, 이규창

### Studies Series

2008-01	Conceptions of Democracy and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Kim Soo-Am
2008-02	Internal and External Perceptions of the North Korean Army	Jeung Young-Tai
2008-03	PSI and the Korean Position	Cheon Seong-Whun
2008-04	Transformation of the U.S.-Japan Alliance and South Korea's Security Strategy	Kim Kook-Shin, Yeo In-Kon, Kang Han-Koo
2008-05	Changes in North Korea as revealed in the Testimonies of Saetomins	Lee Kyo-Duk, Lim Soon-Hee, Cho Jeong-Ah, Lee Gee-Dong, Lee Young-Hoon
2008-06	Economic Hardship and Regime Sustainability in North Korea	Suh Jae-Jean
2009-01	The Evaluation of Regime Stability in North Korea: Scenario Workshop	Choi Jin-Wook, Kim Kook-Shin, Park Hyeong-Jung, Cheon Hyun-Joon, Cho Jeong-Ah, Cha Moon-Seok, Hyun Sung-Il
2009-02	Developing Inter-Korean Economic Relations for the 'Advancement of the Korean Peninsula'	Lim Kang-Teag, Kim Kyu-Ryoon, Jang Hyung-Soo, Cho Han-Bum, Choi Tae-Uk
2009-03	The Everyday Lives of North Koreans	Cho Jeong-Ah, Suh Jae-Jean, Lim Soon-Hee, Kim Bo-Geun, Park Young-Ja

- 2009-04 North Korea's Regime Maintenance Policy Since the Kim Jong-il Regime and Prospects for Change Chon Hyun-Joon, Jeung Young-Tae, Choi Soo-Young, Lee Ki-Dong
- 2010-01 Strategy for Encouraging North Korean Opening: Basic Direction and Sequential Tasks Choi Jinwook, Lee Kyo-Duk, Cho Jeong-Ah, Lee Jin-Yeong, Cha Moon-Seok
- 2010-02 Unification Clock: Predicting Korean Unification Park Young Ho

## 기타

---

- 2010 2010 Unification Clock: When Will We see a Unified Korea Park Young Ho
- 2010 In Search of New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Kim Kyu-Ryoon



## 통일연구원 회원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 1. 회원 구분

-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종사자
-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 2. 가입방법

- 가)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 나)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 다)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 3. 회원 특전

-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학술회의 총서, 협동연구총서, 통일정세분석 등 우송
-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 라) 구간자료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 4. 회원가입 문의

- 가) 주소: (142-728)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1307(수유동) 통일연구원 통일 학술정보센터 출판정보관리팀 도서회원 담당자(pcm@kinu.or.kr)
- 나) 전화: (02)901-2559, FAX: (02)901-2547
- 다)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 가입기간 중 주소변경시에는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의 **한반도 통일비전과 국제협력**

한반도 통일비전과 국제협력

이흥구(전 국무총리)

제1회의 토론

제2회의 **통일대비 무엇을 할 것인가: 통일연구원의 역할과 발전방향**

통일과제의 성격 변화와 통일연구원의 새 역할

이상우(전 국방선진화추진위원장)

제2회의 토론